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 **2023년 예산안**

---

**2022. 8.**

**기 획 재 정 부**

# 순서

I. '23년 예산의 의미와 기초 .....	1
II. '23년 예산안 전체모습 .....	2
III. 재정혁신 .....	8
IV. 중점 투자방향 .....	10
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2.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3.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별첨] 분야별 투자방향 .....	48

# I. '23년 예산의 의미와 기초

◇ 새정부 편성 첫 번째 예산안 : 국정기조 확실한 구현

① 확장재정 →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면 전환

② 역대 최대 지출 재구조화 기반, 국정과제·핵심정책과제 적극 이행

## 1 재정기조를 확장재정 →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

○ 그간의 정부주도 확장재정에서 탈피, 민간·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

○ '확장재정' →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그간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

	'09~'13년	'14~'17년	'18~'22년	'23년案
총지출증가율 평균 (본예산 기준)	5.9%	4.0%	8.7%	5.2%

## 2 국정과제 확실한 이행,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 부모급여, 병 봉급 인상,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재원을 집중 배분

## 3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마련

○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소요 충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 개별사업 집행률 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 Ⅱ. '23년 예산안 전체모습

### 1

### 재정총량

① '23년 총수입은 **625.9조원** [전년대비 +72.4조원, +13.1%]  
 [2차 추경대비 +16.8조원, +2.8%]

- 국세수입은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  
 ('22년 본예산 343.4조원 → '23안 400.5조원)
-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3% 증가  
 ('22년 본예산 210.2조원 → '23안 225.5조원)

② '23년 총지출은 **639.0조원** [전년대비 +31.4조원, +5.2%]  
 [2차 추경대비, △40.5조원, △6.0%]

-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총지출 인상폭 상당부분 흡수하여  
 예년 대비 대폭 줄어든 5.2% 증가

- ① '18~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
- ② 지방교부세·금(+22조원)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원(+1.5% 수준)

< 2023년 재정운용 모습 >

(단위 : 조원, %)

	'22년		'23안(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 총수입	553.6	609.1	625.9	72.4	13.1
· 국세수입	343.4	396.6	400.5	57.1	16.6
· 국세외수입	210.2	212.4	225.5	15.3	7.3
◇ 총지출	607.7	679.5	639.0	31.4	5.2
· 예산	413.0	449.8	441.3	28.3	6.9
· 기금	194.6	229.7	197.7	3.1	1.6

### 3 재정수지 ·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대비 개선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Delta 0.6\%$ 로 균형에 가깝게 개선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8\%p$  개선 ( $\Delta 4.4 \rightarrow \Delta 2.6\%$ )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Delta 0.2\%p$  개선 ( $50.0 \rightarrow 49.8\%$ )

\* 국가채무 비율(%) : ('18) 35.9 ('19) 37.6 ('20) 43.6 ('21) 46.9 ('22) 50.0 ('23안) 49.8  
(단위 : 조원, %)

	'22		'23안(B)	증감(B-A)
	본예산(A)	2회 추경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54.1$ ( $\Delta 2.5$ )	$\Delta 70.4$ ( $\Delta 3.3$ )	$\Delta 13.1$ ( $\Delta 0.6$ )	<b>+41.0</b> ( <b>+1.9%p</b> )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94.1$ ( $\Delta 4.4$ )	$\Delta 110.8$ ( $\Delta 5.1$ )	$\Delta 58.2$ ( $\Delta 2.6$ )	<b>+35.9</b> ( <b>+1.8%p</b> )
◇ 국가채무 (GDP대비, %)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b>+70.4</b> ( $\Delta 0.2\%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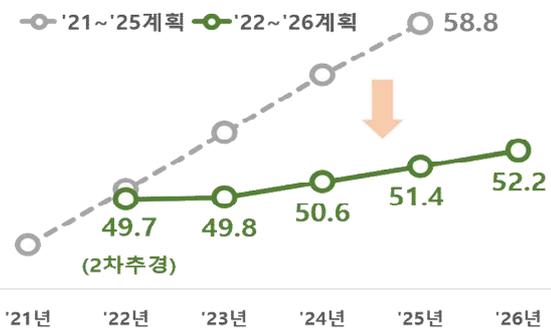
### 4 임기 내 '24~'27년 건전재정기조 견지 : 재정수지 $\Delta 3\%$ 이내 관리

-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Delta 3\%$  이내)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중기 재정총량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
  - 총지출증가율은 '23년 5.2%에서 경기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하향, '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3~'26년  $\Delta 2\%$ 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 관리

[관리재정수지:  $\Delta 2\%$ 대 중반]



[국가채무: '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



◇ 국정과제는 당초 재정투자계획('23~'27년 209조원)상의 첫 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 → '23년 예산안에 총 11조원 수준 편성

□ (당초 재정투자계획 :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5년간('23~'27년) 209조원(국비기준) 투자 계획

□ ('23년) 예산안 반영 +11조원 수준

① 병 봉급 등을 '22년 82 → '23년 130만원으로 인상(+1.0조원)

\* 봉급(병장 기준) + 사회진출지원금 인상 스케줄 :  
( '22) 68+14 → ('23) 100+30 → ('24) 125+40 → ('25) 150+55만원

② 만 0세 아동 月 70만원 부모급여\* 신설(+1.3조원)

\* ('22) 영아수당 30 → ('23) 부모급여 도입 70 → ('24) 100만원

③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첫집' 5.4만호 공급(+1.1조원)

\* '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총 50만호 공급 계획

④ 청년도약계좌 도입(+0.4조원)

\* 가구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月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 반영(+0.3조원)

\* '22~'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캠프 출자

⑥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0.3조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10.7→11.5만명), 저상버스 확대(2.3→4.3천대) 등

□ ('24~'27년) 지속 투자를 통해 임기 내 국정과제 완성

○ '27년까지 부모급여(~'24년 100만원), 병 봉급(~'25년 205만원), 청년주택(~'27년 50만호) 등의 당초 목표 달성 추진

## 【 주요 국정과제 반영 현황 】

(단위 : 조원)

주요 사업	'23년 예산안	주요 사업	'23년 예산안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0.7	전국민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0.2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등)	+1.0	농업직불금 확대 (과거 지급실적 요건 폐지)	+0.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47%)	+0.4	부모급여 月 100만원 ('23년 月 70만원)	+1.3
국민안심지원제도(긴급복지)	+0.1	무공해차 보급 (23.6→29만대)	+0.3
기초연금 인상 (月 30.8→32.2만원)	+2.4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	+0.1
장애인 활동지원	+0.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0.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2.3→4.3천대)	+0.1	국방기술 등 핵심기술개발(R&D)	+0.3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23년 5.4만호)	+1.1	병 봉급 200만원 (82→130만원)	+1.0
청년 목돈마련 지원 (청년도약계좌)	+0.4	기타	+α

### 3

## 분야별 자원배분

◇ 총지출증가율은 5.2%이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가용자원 증가율은 1.5% 수준에 불과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 130.1 → ('23) 152.6조원, +22.5조원

◇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과제(사회적약자, 미래대비) 연관 분야 집중 지원

분야		주요 증감요인
국방	4.6%	· 병 봉급 인상,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첨단 전력 증강 관련 투자 확대
복지	4.1%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환경	3.9%	· 탄소감축 지원 강화, 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
R&D	3.0%	· 7대 핵심 전략기술 및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기술 중점 투자
산업· 중소	△18.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지원 종료 · 반도체,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등 확대
SOC	△10.2%	· 완료소요, 지방이양 등 반영 · SOC 첨단화,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문화	△6.5%	· 지방이양 소요 등 반영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확대
지방재정 (교부세·금)	17.3%	·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금 증가

<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구 분	'22년 본예산 (A)	'23년 정부안 (B)	(조원)	
			증감 (B-A)	%
◆ 총지출 (지방교부세·금 제외)	607.7	639.0	+31.4 (+8.9)	5.2 (1.5)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8.9	4.1
2. 교 육 (교부금 제외)	84.2 (19.1)	96.1 (18.9)	+12.0 (△0.2)	14.2 (△1.3)
3. 문화·체육·관광	9.1	8.5	△0.6	△6.5
4. 환 경	11.9	12.4	+0.5	3.9
5. R&D	29.8	30.7	+0.9	3.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5.6	△18.0
7. SOC	28.0	25.1	△2.8	△10.2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0.6	2.4
9. 국 방	54.6	57.1	+2.5	4.6
10. 외교·통일	6.0	6.4	+0.4	7.3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0.5	2.4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98.1 (33.0)	111.7 (36.4)	+13.6 (+3.4)	13.9 (10.3)

### Ⅲ. 재정혁신

#### 1

#### 지출 재구조화

- **(총량)** 재량지출 중심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실시
  -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국민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 마련
- **(방향)** 새 국정운영 방향 반영, 4대 유형 중심 재구조화 추진
  -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민간역량 활용 + 공공부문 효율화** 방향 아래 **전략적 접근**

유형	주요 사례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b>①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 민간중심 전환</b> - (노인일자리) 단순노무 공공형 축소, 사회서비스·민간형 확대 - (창업지원) 정부·공공 직접 선정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 확대
	<b>② 정책금융 직접용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b> - 민간 조달 가능 고신용층 직접용자는 이차보전 전환
	<b>③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 위해 선택과 집중</b> -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스마트공장 구축 민간주도로 전환
재정 투자 효율화	<b>④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 통한 지원 적정화</b> -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 적정화
	<b>⑤ 여건변화 반영 등 투자중점 전환 및 우선순위 조정</b>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
	<b>⑥ 사업목적 달성 제고 위한 추진체계·지원방식 개편</b> -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중복인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
한시지출 정상화	<b>⑦ 코로나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상화</b>
공공부문 출선수범	<b>⑧ 저성과 위원회 조직 정비 및 공공부문 고통분담 강화</b> - 재정수반 위원회(246개)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 - 장차관급 이상 10% 반납, 4급 이상 동결, 5급 이하 1.7% 인상

## 2

## 재정총량 관리 강화

-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
  - (준칙한도) 관리재정수지  $\Delta 3\%$  이하(채무비율 60% 초과시 한도 축소)
  - (도입형태) 법률에 준칙한도 명시 → 높은 수준의 구속력 확보
  - (예외규정)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준칙 면제 가능
    - \* 단, 위기 종료시에는 바로 준칙기준으로 복귀 +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 ※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

## 3

##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

- **(민간투자) 대상시설 다양화<sup>1)</sup>, 참여유인 제고<sup>2)</sup>, 민자 관리 체계 혁신<sup>3)</sup>**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연평균 5→7조원+a)
  - 1) 도로·철도 중심 →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
  - 2) 사업방식 다변화, 수익 패러다임 전환,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
  - 3) 재정·민자사업간 연계 강화, 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
- **(사업구조 개편)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
    - \* 특별회계 편성안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과 함께 통과 추진
- **(성과평가) 성과평가 비효율 제거<sup>1)</sup>, 평가결과의 환류 제도화<sup>2)</sup>, 성과정보의 대국민 공개<sup>3)</sup>**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효과성 제고
  - 1) 6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11개 성과평가의 평가항목·시기 표준화
  - 2)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 구조조정 원칙 도입
  - 3)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대국민 공개
- **(예타 관리) 불명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객관화\***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면제 최소화
  - \* (예) (現) 기존시설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 →
  - (改) 일부시설 신설이 포함되거나 기존시설대비 증설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IV. 중점 투자방향

목표

역동적 경제 및 행복사회 구현

기본  
방향

재정기조를 확장기조→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 전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기반,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뒷받침

투자  
중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②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③ 생활물가 안정 지원
- ④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⑤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 ⑥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 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② R&D 고도화
- ③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 ④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 ⑤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①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 ②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 ③ 일류 보훈체계 구축
- ④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⑤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재정  
혁신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총량 관리강화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

**【 '23년 예산안 12대 핵심과제 (총 135조원) 】**

<b>1]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b>	<b>31.6조원</b>
* 소득(18.7조원) + 일자리(1.2조원) + 주거(11.8조원)	
<b>2]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b>	<b>26.6조원</b>
* 장애인(5.8조원) + 노인(20.1조원) + 아동·청소년(0.2조원) + 한부모 등(0.5조원)	
<b>3] 생활물가 안정 지원</b>	<b>5.5조원</b>
* 수급 안정(3.9조원) + 생계비 경감(1.1조원) + 식량안보(0.6조원)	
<b>4]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b>	<b>24.1조원</b>
* 자산형성(2.5조원) + 주거(6.8조원) + 일자리(4.3조원) + 사회·복지(10.4조원)	
<b>5]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b>	<b>8.0조원</b>
* 농산어촌 지원(5.4조원) + 지역거점 지원(0.6조원) + 지방재정 지원(2.0조원)	
<b>6]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원 투자</b>	<b>1.0조원</b>
* 인력양성(0.4조원) + R&D(0.4조원) + 인프라 등(0.2조원)	
<b>7]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b>	<b>6.0조원</b>
* 7대 전략(4.5조원) + 6대 미개척(0.4조원) + 민간역량 활용(1.1조원)	
※ 과제분류는 추후 정책 보완시 변경 가능	
<b>8]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b>	<b>3.1조원</b>
* 해외자원개발(0.2조원) + 국산화 R&D(2.2조원) + 공공비축 등(0.6조원)	
<b>9]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b>	<b>4.6조원</b>
* 중소기업(2.4조원) + 벤처·창업(0.6조원) + 소상공인(1.0조원)	
<b>10]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b>	<b>13.1조원</b>
* 병 봉급 및 급식·주거여건 개선(6.9조원) + 보훈(6.2조원)	
<b>11]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b>	<b>4.5조원</b>
* 국내기업 해외진출(1.5조원) + 개도국 협력(2.0조원) + 국제기구 협력(1.0조원)	
<b>12]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b>	<b>7.2조원</b>
* 수해 등 재난대응(5.8조원) + 현장대원 장비(0.3조원) + 생활안전(1.1조원)	

1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23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2년	'23년
사회안전망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월 154만원	월 162만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기본공제, 서울)	생계 69백만원 의료 54백만원	생계 99백만원 의료 99백만원
	전세피해 긴급 용자	-	1,660억원
	취약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	이사비 4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용자
사회적약자 보호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6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월 125시간	월 154시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	월 40만원
생활물가 안정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90억원	1,690억원
	에너지바우처	12.7만원	18.5만원
	밀 비축	1.4만톤	2.0만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K-HighTech Training	2.8만명	3.6만명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11.6만원/월	20만원/월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7천개소
지역 균형발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	4.7만명/120만원
	어촌신활력증진	-	60개소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도입	월 30만원 (영아수당)	월 70만원
	야간연장 보육료	3,200원/h	4,000원/h
	아이돌봄 지원	7.5만 가구	8.5만 가구

##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27.4→31.6조원]

- ◇ 기준중위소득 5.47%(4인) 인상, '15년 제도 도입후 최대 폭
- ◇ 특고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완화(+28만명)
- ◇ 취약지 거주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신설

### 【 소득 】

[16.4→18.7조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보호체계 구축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5.47%\*, 4인)으로 생계급여액 月 154→162만원(4인)으로 상향,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23.3% 인상

\*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의 80%)는 가중치 상향으로 전년대비 6.84% 인상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최대급여액(중위 30%) 月 154→162만원(4인) 상향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33.1→41.5만원, 중등 46.6→58.9만원, 고등 55.4→65.4만원 상향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sup>신규</sup>(+4.8만가구)\*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3.4만가구)를 통해 기초생보 사각지대 보완

\* 생계급여는 '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급여는 '09년 이후 14년만에 재산기준 완화

- (생계·의료) (생계)기본공제 69→9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20→172백만원으로 완화(서울기준), (의료)기본공제 54→9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00→172백만원으로 완화(서울기준)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6→47% 이하 가구로 확대해 3.4만 가구 추가 지원

○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 (재난적의료비) (의료비기준)연소득 15→10% 초과, (재산기준)5.4→7억원, (한도)年 3→5천만원
- (상병수당)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의 2단계 시범사업 3개소 확대(6→9개소)

○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月 154→162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

## 【 고용 】

(1.1→1.2조원)

- (사회보험) 저임금 근로자, 특고·예술인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27.8만명)
  - (사업장기준) 예술인·특고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중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10.3만명)
  - (소득기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130%으로 확대(+17.5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月 50만원)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月 50→60~90만원)하여 생계지원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참여자의 조기취업 유도
    - \* (현행) 50만원 → (개편) 취업시기에 따라 50~125만원 지급

## 【 주거 】

(9.9→11.8조원)

- (주거상향)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보증금\*\* 지원<sup>신규</sup>(1.5만가구, 0.3조원)
  - \*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 \*\* 이사비·생필품 지원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 용자 최대 5,000만원
-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사전<sup>사전</sup>보증 가입비용 지원(20만명)과 사후<sup>사후</sup>긴급대출 지원<sup>신규</sup>(0.2조원)
  - \* (사전)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평균 年 6.1만원), (사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처리용자 지원(1.6억원 한도, 0.2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소득안전망	16.4조원	18.7조원	
- 생계급여	52,648	60,141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및 재산기준 완화
- 의료급여	81,232	90,984	재산기준 완화, 수급인원 확대 등
- 재난적의료비지원	400	568	지원요건 완화, 지원한도 상향
○ 고용안전망	1.1조원	1.2조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466	10,764	소득기준 및 예술인·특고 사업장기준 완화
○ 주거안전망	9.9조원	11.8조원	
- 구입·전세자금용자	95,300	106,360	고금리 상황에서 주거금융 지원 +1.1조원 확대
-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용자	-	2,550	공공임대 이주 1만명 × 50만원 한도 민간임대 이주 5천명 × 5천만원 한도
- 전세피해 긴급용자	-	1,660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피해시 최대 80% 용자

## 2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3.2→26.6조원]

- ◇ (장애인) 장애수당 '15년 이후 최초 인상(月 4→6만원),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보장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月 30→40만원), 의료비(연평균 15만원) 신규 지원
- ◇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대폭 확대(중위 52→60% 이하)

### 【 장애인 】

[5.1→5.8조원]

- (돌봄) 발달장애인 낮 8시간을 온전히 보장(月 125→154시간, 1만명)하고 긴급돌봄 제공<sup>신규</sup>(40개소),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개편·시간 확대(최대 日 8시간/月 22일 지원), 보호자 우울증, 사망 등 긴급상황 시에 긴급돌봄 제공(40개소, 최대 7일)<sup>신규</sup>
- (최중증장애인)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가산급여 대폭 확대(4→6천명, 月 30→45만원)
-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月 70→80시간, 발달재활 지원단가 月 22→25만원 인상

- (소득·고용) 장애수당(月 4→6만원)·장애인연금(月 30.8→32.2만원)을 인상하고,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장려금, 출퇴근비 지원 확대

- (장애수당) '15년 이후 동결된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月 4→6만원) 인상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月 30.8→32.2만원) 인상
-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月 30~80→35~90만원)
- (출퇴근비용) 기존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 추가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月 5만원) (0.3→1.5만명)

- (생활) 이동편의·교육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sup>신규</sup>하고, 평생학습도시 확대(15→53개소)

- (이동편의)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sup>신규</sup>, 저상버스 2.3→4.3천대 확충
- (교육·문화) 평생학습도시 15→53개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10→14천명 확대
-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200→400명,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 확대(月 60→80시간)

- (의료) 장애 조기발견·개입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발달장애인)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건보 하위 70→80%), 거점병원 10→12개소
- (의료인프라)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 구축<sup>신규</sup>, 권역구강진료센터 15→16개소 확대

## 【 노인 】

(17.4→20.1조원)

- (소득·고용) 기초연금(月 30.8→32.2만원) 인상,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23.7→27.5만개) 확대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소득) 기초연금 지원대상(628→665만명) 확대, 지원금액(月 30.8→32.2만원) 인상
- (고용) 민간(16.7→19.0만명)·사회서비스형(7.0→8.5만명) 일자리, 고용장려금(0.9→6.1만명) 확대

- (돌봄)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돌봄서비스 확대(50→55만명) 및 시설이용자 안전 등을 위한 요양시설 CCTV 설치 <sup>신규</sup>(6천개소)

-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50→55만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30만대) 지원대상 확대
- (의료) 요양시설 CCTV 설치 <sup>신규</sup>(6천개소), 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 신축 8개소, 증·개축 6개소)

## 【 아동·청소년 】

(0.16→0.21조원)

-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月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sup>신규</sup>

- (자립지원수당) 지원단가를 月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1.0→1.2만명)
-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sup>신규</sup>(8,000명, 연평균 15만원)
- (정서지원)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 <sup>신규</sup> 자조모임 활성화 <sup>신규</sup> 등

-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 보호·치유·회복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보호·치유) 학대피해아동쉼터(141→177개소), 전담의료기관(8→17개소) 확대
- (회복지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확대(1,000→1,200가정)

- (학교밖청소년)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0.2만명)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月 최대 55→65만원으로 인상

- (희귀질환아동)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130%로 확대(0.4→0.6만명)

## 【 한부모 · 다문화 】

(0.43→0.50조원)

- **(한부모가정)**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3.8만명(22.1→25.9만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 (한부모) 지원기준 중위소득 52→60% 상향(月 20만원)
- (청소년한부모) 지원기준 중위소득 60→65% 상향(月 35만원)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78→113개소) 및 학습지원(90→138개소)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장애인	5.1조원	5.8조원	
- 장애수당	1,424	2,150	장애수당 +2만원 인상(月 4→6만원)
- 발달장애인지원	2,080	2,528	주간활동서비스 日 8시간 보장(月 125→15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40개소)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90	219	최중증장애인 돌봄 인센티브 확대 (4→6천명, 月 30→45만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1,492	1,757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6.9→7.9만명), 지원단가(月 22→25만원) 인상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1,091	2,245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신설 저상버스 확충(2.3→4.3천대)
○ 노인	17.4조원	20.1조원	
- 기초연금	161,140	185,304	지원단가 인상(月 30.8→32.2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66	5,020	대상자 +5만명 확대(50→55만명)
○ 아동·청소년	0.16조원	0.21조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75	437	자립수당 월 30→40만원, 지급인원 1.0→1.2만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체계 구축	77	12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규 지원 (연 8,000명, 1인당 약 15만원) 등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97	471	학대피해아동 쉼터 141→177개소, 요보호아동 그룹홈 517→527개소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381	413	아동보호전문기관 95→105개소, 방문형 가정회복 1,000→1,200가정
- 희귀질환자 지원	367	394	만 18세 미만 지원기준 상향(중위 120→130%)
○ 한부모 · 다문화	0.43조원	0.50조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213	4,959	선정기준 상향(중위 52→60%)
-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37	57	심리상담 및 직업컨설팅(78→113개소), 취학전후 학습지원(90→138개소)

## [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맞춤형 지원 (23.4→24.1조원) ]

### □ [자산형성]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2.0→2.5조원)

- (일반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sup>신규</sup> 도입(306만명)
  - \* 가구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月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 저소득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 확대(10.4→17.1만명)
  - \* 가구 중위 100% 이하, 만기 3년, 청년 月 10만원 + 정부매칭 최대 30만원
- (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비율을 상향하여 전역시 최대 1,290만원(본인 750만원 + 정부 250→540만원) 수령

### □ [주거]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등 주거사다리 강화 (6.3→6.8조원)

- (내 집 마련)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sup>신규</sup>(청년월가 +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공 직접공급 착수
  - \* 시세 70% 이하 공급 + 매각 차익 70% 귀속 → 내집마련 + 자산형성 뒷받침
- (전세 보호)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sup>신규</sup> 지원(20만 가구)

### □ [일자리]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5.4→4.3조원)

- \* 청년대상 고용장려금(22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등 한시사업 제외시 3.8→4.0조원
- (직업훈련)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 확대(2.8→3.6만명)
- (고용서비스) NEET·대학생 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1.0→5.5만명)
  - \* 구직단념청년(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참여시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원, 0.5만명)<sup>신규</sup>, 대학생(도약보장패키지 3만명)<sup>신규</sup>, 구직청년(일경험 1→2.0만명)
- (장려금) 취약청년의 고용촉진과 장기채용 유도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1년간 총 960 → 2년간 총1,200만원)

### □ [사회·복지] 병봉급 인상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9.7→10.4조원)

- (병역 복무여건) 병 봉급(병장기준 67.6→100만원) 및 급식단가(日 1.1→1.3만원) 인상 등을 통해 희생에 대한 예우 강화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단가·대상 확대(월 30→40만원, 1.0→1.2만명), 사례관리 대상 확대(1,470→2,000명) 등 지원 강화

### 3 생활물가 안정 지원

[4.7→5.5조원]

- ◇ **핵심품목 비축 확대, 유통망 스마트화** 등 주요품목 수급안정 유도
-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에너지바우처** 단가 **50% 수준 인상**
- ◇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국제곡물 유통망 투자 지원** 등 식량안보 강화

#### 【 주요품목 수급 · 가격안정 】

[3.5→3.9조원]

- **(수급관리)**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 밀(1.4→2.0만톤), 대중성 수산물(1.3→3.2만톤) 등 주요품목 비축 확대
  - 가격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생산량의 20→23%, +100억원)
- **(유통구조)** 유통망 온라인 · 스마트화로 비용 상승압력 완화
  - 유통정보 전산화, 선별 · 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 확대(10→15개소, +110억원)
  - 저온·친환경 위판장 도입(5개소),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49억원)<sup>신규</sup> 등 유통 · 거래과정 디지털 전환
- **(생산부담 경감)**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1,144억원) 및 계란공판장 운송비 지원(+56억원)으로 생산비용 절감 지원

#### 【 필수 생계비 경감 】

[0.8→1.1조원]

-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규모를 **2배 이상 확대**(590→1,690억원)
- **(에너지)** 저소득층 등 대상\*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40% 이상 대폭 인상**(연간 12.7→18.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 가정이 있는 약 85.7만 가구 대상

- **(생필품)**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바우처 단가 인상(+122억원)  
\* (기저귀) 6.4→8.0만원/月, (조제분유) 8.6→10.0만원/月, (생리대) 1.2→1.3만원/月
- **(교통)**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 확대(44→64만명, +124억원)  
\*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한 할인 혜택 제공
- **(여가·교육)** 차상위 이하의 도서구입비·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 인상\***(+555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10→11만원/年 (스포츠강좌이용권) 8.5→9.5만원/月

## 【 식량안보 강화 】

(0.4→0.6조원)

- **(국내생산)** 가루쌀 산업화 지원<sup>신규</sup>, 밀·콩 생산단지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밀·콩 이모작:250만원/ha) 등 핵심작물 생산 촉진  
\* 식품업체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15개), 밀·콩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44→50개소)
- **(수입선 다변화)**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인수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500억원 한도) 이차보전 지원(13억원<sup>신규</sup>)  
- **국내 농업기업의 해외진출\***(현지 생산) 지원 확대(12→15개)  
\*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현지 생산 환경 등 정보제공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b>○수급관리 안정적 지원</b>	<b>34,773</b>	<b>38,706</b>	
- 농수산물 비축지원	2,712	4,068	밀(1.4→2.0만톤), 대중성 어종(1.3→3.2만톤)
- 농산물생산유통조절	456	556	채소가격안정제 확대(20→23%, +100억원)
- 온라인거래활성화	12	49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
<b>○필수 생계비 경감</b>	<b>7,845</b>	<b>10,683</b>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	1,690	농축수산물 할인 품목 및 기간 확대
- 에너지바우처	1,389	1,824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2.7→18.5만원)
<b>○식량안보 강화</b>	<b>4,357</b>	<b>6,108</b>	
- 전략작물직불	20	278	밀·콩 이모작: 250만원/ha, 콩가루쌀: 100만원/ha
- 농업자금이차보전 (국제곡물망 확보)	-	13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투자비용 이차보전
- 가루쌀 산업화 지원	-	107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25개소)

#### 4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1.0→12.1조원]

- ◇ 일자리 예산은 정부 직접지원(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은 축소, 민간일자리 연계(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

#### 【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

[3.0→3.3조원]

- (직업훈련) 시장 수요(첨단산업·국가기간전략산업), 개인·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2.3→2.6조원)

- 첨단산업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K-HighTech Training) 확대,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 강화

- (K-HighTech) 디지털 →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2.8→3.6만명, +915억원)
- (대학 활용)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구축<sup>신규</sup>(10개소, 112억원)  
폴리텍 첨단산업학과(반도체, AI 등) 신설·개편(25개, +350억원)

- 국가기간산업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일반직종 +5%, 인력부족직종 +10%)· 훈련장려금(월 11.6→20만원) 인상으로 훈련 성과 제고

- 맞춤형훈련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기업직업훈련카드), 플랫폼종사자,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훈련 신규 지원

- (기업) 기업직업훈련카드<sup>신규</sup>(1.5만개, 357억원), 능력개발주치의<sup>신규</sup>(15개 센터, 71억원)
- (개인)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sup>신규</sup>(20만명, 200억원), 중장년 새출발 훈련(0.5→1.0만명, +50억원)

- (고용서비스) 고용복지+센터 중심 특화센터(새일센터 등) 통합·연계,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도입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375억원)

- (전달체계) 고용복지+센터 중심 새일센터 등 특화센터 통합·연계<sup>신규</sup>(4개소, 180억원)
- (기업도약패키지)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조선업 등) + 맞춤형 채용서비스(+24억원)
- (구직자도약패키지) 역량진단·경력설계·일자리추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63억원)

- **(지역고용)**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확대**(+356억원)

\* 지자체별 평균 지원규모를 17→38억원으로 2배 이상 상향

- **(산업안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업종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중처법 적용대상이 '24.1월부터 50인 이상 →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 (산재보험) 특고 적용범위 확대(23.7월 1개 사업장 전속성 요건 폐지(+71.6만명))
-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위험공정 교체(1.5→2.2천개소), **유해물질 환기장치 설치** 신규(373개소)
-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전문가 컨설팅(0.2→1.6만개소), 안전보건 교육(42.5만명→56.1만명)

- 근로 환경이 취약한 6개 업종(청소·경비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지원(0.7만개소, +22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b>○ 직업훈련·고용서비스</b>	<b>30,114</b>	<b>33,297</b>	
- 내일배움카드	12,246	14,151	국기훈련 훈련단가·훈련장려금 인상(+1,142억) K-HighTech Training 확대(+914억)
- 사업주직업훈련	2,744	3,080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1.5만개 기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319	1,445	첨단산업특화 공동훈련센터(15→20개)
- 직업안정기관운영	438	702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4개소), 업종별 취업지원센터(반도체, 조선) 구축
<b>○ 지역고용·산업안전</b>	<b>79,848</b>	<b>87,878</b>	
- 산재보험급여	71,463	77,923	특고 적용대상 확대(+71.6만명)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509	5,070	노후·위험공정 교체지원, 환기장치 설치
- 업종별재해예방	914	1,315	안전전문가 컨설팅(0.2→1.6만개) 등
- 일터혁신 지원	257	280	임금체계 개편,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등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1,327	1,475	지역혁신프로젝트 294→650억원

5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6.0→8.0조원)

- ◇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가구),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4.7만가구)
- ◇ 지방재정 +1.2조원 순증(지방소비세 +1조원, 특별양여금 +0.2조원)

【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

(4.8→5.4조원)

- (농어가 소득안정) 농업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56만명, +0.3조원)
  - \* 과거('17~'19년 요건)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 삭제
  -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대한 직불금(120만원/년) 신설<sup>신규</sup>(4.7만가구, 512억원)
- (정주여건 개선) 민자유치를 병행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신규 착수<sup>신규</sup>(60개소, 444억원)하고, 농촌공간정비 확대(45→85개, +415억원)
  - \* '23~'27년간 총 300개소에 총 2조원(국비 기준) 지원 계획
- (농어업 경쟁력 강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확대(2,000→4,000명) 및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0.1조원)
  -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농지 장기임대(81억원<sup>신규</sup>), 농업스타트업단지 공급(6ha<sup>신규</sup>)
  - (팜·주택) 비축농지활용 스마트팜 조성(6ha<sup>신규</sup>), 스마트팜 인근 임대주택단지 조성(4개소)
  -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0→13개), 농업용 로봇 실증(과수·논·밭 3종),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1개소<sup>신규</sup>) 등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0.1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공익기능증진직불	23,610	26,868	기본직불 사각지대 해소(56만 농업인농가, +0.3조원), 전략작물직불 개편(밀·콩 이모작:250만원/ha 등)
- 수산공익직불제	559	933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120만원 4.7만명)
- 어촌신활력증진	-	444	신규 지자체 60개소 선정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89	551	지원인원(2,000→4,000명), 지원금(월100→110만원)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48	63	농업용 로봇 3종(과수, 논, 밭) 실증

## 【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

[1.2→2.6조원]

- **(지방재정 보강)**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확대(0.8→1.0조원), 지방소비세 증가(+1조원<sup>수준</sup>,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원 1.2조원 순증
- **(지역 성장거점)** 행정기관 이전 및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 조성·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0.2조원)

- (행정)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설계비 1억원<sup>신규</sup>), 혁신도시 재구조화(+9억원) 등
- (산업) 디지털 혁신거점(2개소, 44억원<sup>신규</sup>), 연구산업진흥단지(2개소, 50억원<sup>신규</sup>),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5개 권역, 77억원<sup>신규</sup>) 등
- (문화) 관광거점도시(+92억원), 문화도시(+90억원) 육성 등
- (교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6→8개 지역), 캠퍼스혁신파크(7→9개교) 등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7,500	10,000	인구감소지역(89개) 등 연간 1조원 지원
- 대통령 제2집무실	-	1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 반영
- 행정기관 추가 이전	9	240	기상청 등 기관 지방이전 추진
- 세종스마트시티	195	205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5생활권)
- 혁신도시 재구조화	49	58	공유오피스(3→5개소), 혁신융합캠퍼스(3→6개소) 등
- 연구개발·디지털 거점	-	171	디지털 혁신거점, 연구산업진흥단지(각 2개지역), 지역 메가프로젝트(5개 권역, 신규)
- 문화·관광거점 조성	1,117	1,309	관광거점도시(5개소), 문화도시(18→ 24개소) 등
- 지역대학 교육허브	2,650	3,17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600억원) 등

###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할 강화

- 지역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 등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 규모 대폭 확대\*(10.9→ 12.7조원, +1.8조원)
  - \* 지식산업센터(618→ 1,394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100→ 632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397→670억원), 슬레이트관리(763→ 849억원) 등
- 시·도 자율사업 유형 확대(13→ 24개), 인구감소지역 보조율 상향(+5%p, 포괄보조사업) 등 지역 자율성 제고, 낙후지역 지원 강화

- ◇ 月 70만원의 **부모급여 신규 도입**(0세 아동, '24년 100만원)
- ◇ **돌봄·고용유지·건강관리 등 숲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 확대**

○ **(양육부담 완화)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月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24년 50~100만원) **도입** **신규**(+1.3조원)

\* (만 0세) '22년 월 30(영아수당) → '23년 70(부모급여 도입) → '24년 100만원  
 (만 1세) '22년 월 30(영아수당) → '23년 35(부모급여 도입) → '24년 50만원

-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

- (저소득층) 기저귀(月 6.4→8만원), 분유(月 8.6→10만원) 바우처 지원수준 상향
-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 52→60%으로 확대(月 20만원, 22.1→25.9만명)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 60→65%으로 확대(月 35만원, 0.3만명 수준)

○ **(돌봄공백 해소) 연장보육·아이돌봄 대폭 확대를 통한 맞벌이가구 양육부담 경감 및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신설**(0.45→0.57조원)

- (연장보육)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 확대**(42→48만명)
- (야간연장보육) 실질적인 야간연장반 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3.2→4.0천원/h) · 교사인건비(月 149→179만원) **대폭 상향**
-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가구 지원대상(7.5→8.5만가구) 및 지원시간(年 840→960시간) **확대**
- (생활서비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 **신규**(月 평균 20만원, 3.2만가구)

○ **(일·가정 균형) 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사업주 지원 확대**로 일하는 부모의 부담 완화(1.9→2.1조원)

-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12.8→13.2만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0.9→1.9만명)
- (사업주) 육아휴직·육아기(2.2→2.7만) 및 가족돌봄(1.3→1.6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 **(모자 건강관리) 출산 후 산모·영아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등 대상 정서적 지지 서비스 확대**(88→97억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가정 직접방문(보건소 50→75개소)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 설치 확대(5→7개소)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양육부담 완화	3.6조원	4.7조원	
- 부모급여	3,731	16,249	('23)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급 ( '24)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지급
- 아동수당	24,039	22,564	만 0~7세 아동에게 月 1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3,731	3,194	출생 직후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 지급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70	382	기저귀 月 6.4→8.0, 조제분유 8.6→10.0만원, 지원대상 연간 8.3→9.5만명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213	4,959	소득기준 상향(52→60%)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22.1→25.9만명
○ 돌봄공백 해소	0.45조원	0.57조원	
- 연장보육료 지원	692	775	퇴근 등으로 17:00~19:30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보육료 지원 42→48만명
- 야간·휴일보육료 지원	249	283	야간연장 보육료 3.2→4.0천원/h
- 야간·휴일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598	648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月 149.2→178.6만원
- 아이돌봄 지원	2,778	3,546	지원대상 가구 7.5→8.5만 확대 지원시간 年한도 840→960시간
- 시간제 보육 지원	209	204	통합반 신규운영으로 지원인원 830→1,030명
-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	-	212	한부모청년가장중장년 1인가구 대상 가사지원·자녀돌봄 등 생활서비스 제공(3.2만가구)
○ 일·가정 균형	1.9조원	2.1조원	
- 육아휴직 정착 및 고용안정 지원	17,276	18,515	육아휴직(일반) 지원인원 12.8→13.2만명 3+3 부부공동육아휴직 지원 0.6→1.4만명 육아휴직 장려금(사업주) 지원 1.9→2.0만명
- 근로시간 단축 및 워킹맘 보육 지원	1,932	2,359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1.3→1.6만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0.9→1.9만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문화 확산	830	830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CEO 및 근로자 대표 일생활 균형 교육
○ 모자 건강관리	0.01조원	0.01조원	
- 청소년 산모지원	5	5	만 19세 이하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120만원 추가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41	51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만 2세 영아 가정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보건소 50→75개소)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12	14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 부부 정신건강 지원 권역 난임상담센터 확대(5→7개소)

## ◇ '23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2년	'23년
미래전략 산업	반도체 인력양성	1.5만명	2.6만명
	원전기업 지원	사업전환(76社)	역량강화(116社)
	원전 R&D 과제수	83개	157개
R&D 고도화	초격차 전략기술 투자 확대	3.7조원	4.5조원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	0.3조원	0.4조원
	민간역량 활용 R&D 확대	0.8조원	1.1조원
디지털혁신 탄소중립	입체주소체계 구축	2차원 평면	3차원 입체
	녹색금융 공급	3.8조원	9.4조원
	탄소중립형 산단	10개소	15개소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거점	10개소	15개소
	수출기업 해외공동물류센터	1,286개소	1,526개소
	석유 비축량	25만배럴	36만배럴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TIPS 연계지원 기업 수	1.1천개사	1.6천개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6만명	7만명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3.5조원	4조원

## 1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2.8→3.7조원]

-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을 위해 총 1조원 집중 투자
- ◇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인력·R&D·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0.1조원)
- ◇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혁신인재 20.3만명 양성(+4.1만명)

○ (반도체) 美·中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원 투자

- 반도체 인력 양성을 특성화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1.5→2.6만명으로 확대(0.18→0.45조원)

- (학과개편)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 350억원<sup>신규</sup>), 반도체특성화대학(원)(9개교, 570억원<sup>신규</sup>)
- (기자재·시설) 국립대실습기자재 (46→560억원), 반도체공동연구소(60억원<sup>신규</sup>) 등

- 차세대 반도체(AI, 지능형반도체(PIM), 전력 등), 패키징,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 확대(0.34→0.39조원)

- (차세대반도체) PIM인공지능반도체 (506→579억원), K-Sensor(129→254억원) 등
- (패키징) 전략제품창출 글로벌K-패키징육성 (73→215억원)

- 패키징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 개발·IP·설계 등 사업화 지원(0.13→0.17조원)

- (인프라) 나노패키징 (526→618억원), 반도체설계 검증인프라(<sup>신규</sup>140억원) 등
- (사업화) AI반도체실증 (41→125억원), 시스템반도체IPBank (33→54억원) 등

○ (원자력) ①원전기업 역량강화, ②맞춤형 수출지원 및 ③기술개발·④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0.54→0.67조원)

- 핵심기술·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 확대(269→483억원)

- (원전기업 지원) 사업전환 지원(76社, 30억원) → 역량강화 지원(116社, 36억원)  
\* (사업화) 150백만×20개社×80%, (경영혁신) 37.5백만×20개社×80%, (기업회복) 10백만×76개社×80%
- (2단계 처분시설 건설) '22년, 233억원 → '23년 436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23년 2억원(120억원 규모 융자, 이차 3%)

-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189→226억원)

- (국제협력) 한국원전 해외홍보(25억원), 수출대상국 인력교류(2억원) 등
- (해외수주) 해외입찰 참여 등 수주지원(8억원), 원전 중소기업 수출실태 조사(1억원)
- (정보제공) 해외원전시장 정보제공(3억원), 수출대상국 입찰요건 지원(3억원) 등

-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D,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 지원(0.5→0.6조원)

- (R&D)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70억원, 총 0.4조원)<sup>신규</sup>, 원전해체(372억원, 총 0.35조원)<sup>신규</sup> 등
- (인력양성) 재·퇴직자 교육(27억원), 전공자 지원(17억원), 고준위방폐물(10억원) 등
- (기타 인프라) 주민복지사업 추진,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운영 지원 등

○ (혁신인재)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를 16.2→20.3만명으로 확대(1.6→2.0조원)

- (미래원천) 양자·우주·기후·신약 등 원천기술분야 전문인력 2.2만명 양성(0.32→0.33조원)
- (산업기술) 반도체·소부장 등 현장인력 전문기술교육 3.9만명 지원(0.2→0.4조원)
- (디지털) SW·AI·보안 등 디지털분야 현장·전문·핵심인력 14.2만명 육성(1.1→1.3조원)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b>○반도체 경쟁력 강화</b>	<b>6,516</b>	<b>10,137</b>	
- 인력양성	1,844	4,498	폴리텍반도체학과 350억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570억원
- 기술개발	3,368	3,908	차세대지능형반도체 1,338억원, PIM인공지능 반도체 579억원, K-팹리스육성 215억원
- 인프라	1,109	1,471	나노팹고도화 618억원, 설계검증인프라 140억원
- 사업화	195	260	AI반도체실증 125억원, IP Bank 54억원
<b>○원자력 생태계 강화</b>	<b>5,428</b>	<b>6,726</b>	
- 역량강화, 일감창출 등	269	483	사업화 24억원, 경영안정·기업회복 등 12억원, 2단계처분시설건설 436억원, 이차보전 2억원
- 중장기 기술개발	2,917	3,387	원전해체 35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372억원
- 원자력 인프라 등	1,983	2,526	가산금 등 특별지원 1,035억원,
<b>○ 혁신인재 양성</b>	<b>16,080</b>	<b>20,179</b>	
- 미래원천기술	3,209	3,316	에너지인력양성 433억원, K-Medi융합인재 양성 133억원, 융합형 의과과학자양성 107억원
- 산업기술	2,098	4,217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1,053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인재양성 158억원
- 디지털	10,773	12,646	디지털혁신공유대학 1,443억원, SW중심대학 838억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109억원

◇ 시장확보·경제안보에 긴요한 7대\* 핵심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 총 5조원 수준 투자

\* 과제분류는 추후 정책 보완시 변경 가능

7대 전략기술	①반도체, ②5G·6G·양자, ③미래 모빌리티, ④우주, ⑤첨단바이오, ⑥이차전지, ⑦인공지능
6대 미개척분야	①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②난치병, ③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④로봇등 일상혁신, ⑤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⑥우주기초연구 지원

○ (핵심 전략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전략 기술\*분야 4.5조원 투자(3.7→4.5조원)

\* ①반도체, ②5G·6G·양자, ③미래모빌리티, ④우주, ⑤첨단바이오, ⑥이차전지, ⑦인공지능

- (우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본격추진,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sup>신규</sup> 등(0.6→0.7조원)
- (미래모빌리티) 완전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R&D·실증기반마련(0.7→0.8조원)
- (통신·네트워크) 6G선도기술 및 양자컴퓨터·통신·센서, AI기술고도화 등(0.9→1.1조원)

○ (미개척 도전분야)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 연구 지원(0.3→0.4조원)

\* ①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②난치병, ③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④로봇·VR/AR 등 일상혁신, ⑤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⑥우주기초연구지원

- (미래에너지) 핵융합선도기술,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sup>신규</sup> 등(0.05→0.07조원)
- (난치병극복)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sup>신규</sup>, 치매극복연구개발 등(0.04→0.06조원)
- (생활안전)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AI기반풍수해위험도예측기술개발(1.0→1.1조원)

○ (민간역량 활용) 사업성과가 높은 민간연계 R&D 확대

- (민간참여 R&D) 민간투자와의 연계 및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중심 R&D 사업 확대(+0.26조원)

- (민간先투자) TIPS, 민간투자연계형R&D 등 민간 사업성판단 先투자→後정부매칭(0.4→0.5조원)
- (민관협업) 민간협업체 통한 R&D과제 선정, 실증단계 기업참여 확대 등(0.4→0.5조원)
- (스케일업) 전략기술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등 고성장 스케일업 견인(0.04→0.1조원)

- (성과기반 R&D)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뉘먹기식 R&D 사업 지원 축소 및 경쟁형·협업형 R&D 확대(+0.2조원)

- (지출효율화) 개인(생애기본연구 등 연구안전성보장), 중소기업 나뉘먹기식 사업(1.1→0.8조원)
- (다부처 협업)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9→2.2조원)
- (경쟁형 R&D)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 등(0.7→0.8조원)

- (민군기술협력) 우주·반도체 등 안보전략분야 민간 첨단기술 도입 확대 및 산학연 등 민과 軍의 공동기술개발 강화(+0.2조원)

- (민군겸용기술개발) 위성·발사체·반도체 등 첨단기술개발 집중투자(0.11→0.15조원)
- (국방협업형 핵심기술) 산학연 협업을 통한 민간주도 국방기술개발(0.3→0.4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b>○ 핵심전략기술</b>	<b>37,084</b>	<b>45,123</b>	
- 반도체	4,945	6,098	•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140억원 <sup>신규</sup> )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설계·제조) (686→743억원)
- 미래모빌리티	6,661	7,846	• 도심항공모빌리티감시정보획득체계개발(42→76억원) • 차세대자율주행차량통신기술개발 (53→96억원)
- 5G·6G·양자	2,274	2,952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295→325억원) •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 (100→140억원)
- 기타	23,204	28,227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482→1,059억원) •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 (183→289억원)
<b>○ 미개척 도전분야</b>	<b>3,412</b>	<b>4,257</b>	
- 에너지	514	750	•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사업(45억원 <sup>신규</sup> )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기발(70억원 <sup>신규</sup> )
- 난치병	422	569	• 뇌기능규명·조절기술개발 (72→96억원)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112→134억원)
- 생활 안전	1,035	1,132	•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69억원 <sup>신규</sup> ) •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 (30→85억원)
<b>○ 민간역량활용</b>			
- 민간참여 R&D	8,593	11,190	•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2,157→2,681억원) • 민간투자 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308→612억원)
- 성과기반 R&D	51,696	59,160	•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0→240억원)
- 민군기술협력 (민군겸용·국방협업형)	3,634	5,732	• 위성탑재 신호처리장치 기술개발 (11→86억원) • 항공용 고출력 왕복엔진 개발(무인정찰항공기)(100→135억원)

### 3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8.1→8.9조원)

- ◇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0.3→0.4조원)
- ◇ 경제·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으로 新 성장동력 확보(7.8→8.5조원)

####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0.3→0.4조원)

- (국민)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바일신분증 등 18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추진(0.1→0.2조원)

\* 모바일 주민등록증, 통합주소체계, AI 복지사, 디지털 국민정책제안 등

#### 【 참고 :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로 달라지는 일상 】

##### ①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하기

<현재 : 실물 신분증 온라인 사용> 신분증 사본 제출 → 추가 인증(ARS, 계좌 인증 등)  
 <개선 : 온라인 기반 신원확인> 모바일 주민증 제출로 인증 완료(추가 절차 x)

##### ② 3차원 입체주소체계에서 길찾기

<현재 : (지상)도로, 건물 단위> 도로 → 건물 입구(건물 내부 안내 불가)  
 <개선 : 입체도로, 건물 내부> 도로 → 건물 입구 → 승강기 → 복도 → 방 입구

- (정부) 데이터 연계·통합 확대\*, AI 기반 데이터분석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과학적 정책결정 뒷받침(0.02→0.05조원)

\* 업무별 공유 DB 구축 확대(3→8개 +60억원),

\*\* 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수립(복지·의료·세금·안전 등 4개, +16억원) 신규

- (기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 혁신서비스 창출 지원(0.2→0.2조원)

\* 민간·공공 API 연계 활용 신규, 데이터 레이크 구축 신규, 공공·민간부문 마이데이터 유통 등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b>1.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b>	<b>658</b>	<b>1,540</b>	
- 모바일 주민등록증	-	170	비대면 민원처리 및 혁신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클라우드기반 통합주소체계 구축	-	67	현재의 2차원 평면 주소 시스템을 3차원 입체 체계로 전면개편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34	181	입체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주소 DB 구축
- 고정밀 전자지도(1:1000)	100	566	입체주소 구축 기반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b>2.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b>	<b>243</b>	<b>546</b>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208	222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정책과제 분석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시스템	35	211	관련 시스템 통합으로 체계적 방역대응 지원하고, 감염병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 강화
<b>3. 데이터 유통·결합 촉진</b>	<b>1,981</b>	<b>1,964</b>	
- 초거대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	146	데이터레이크 및 혁신서비스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60	136	본인 데이터의 전송,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

- **(녹색경제 기반구축)** 경제·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개선·금융·기술 등 맞춤형 지원(3.2→3.4조원)
  - '27년까지 모든 배출권 할당기업(684개사)에 대해 설비전환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공정혁신 투자 확대(0.5→0.6조원)
    - (설비전환) 할당업체 첨단설비 지원(13개사), 스마트 생태공장(90개) 등(0.2→0.3조원)
    - (녹색산업) 초순수 공업용수·기후테크 등 유망 환경기업 육성(656→710억원)
    -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탄소중립형 산단 10→15개 확대(430→614억원)
  - 친환경·탄소중립 설비 등의 대규모·안정적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지원** **신규** 등 녹색금융 3.8→9.4조원 확대
    - (대규모 투자) 녹색채권 3.9조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52조원 등 7.6조원 공급(860억원)
    - (중소기업) 녹색보증 1조원, 유동화 채권 0.1조원(신규) 등 1.8조원 공급(6,555억원)
  - CCUS, 대체 에너지원 활용 기술 등 혁신 R&D (1.9→2.0조원)
- **(온실가스 감축)** 과학적·실용적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폐기물 등 감축효과가 큰 부문 중점 투자(4.6→5.1조원)
  - 글로벌시장 內 경쟁력이 높은 수소 상용차 지원 강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설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3.3→3.8조원)
    - (무공해차·인프라) 수소버스 보조금 인상 및 연료전지 교체 신규지원 등(2.8→3.3조원)
    - (조기폐차) 4등급 경유차 9만대, 건설기계 1만대 보조금 신규지원 등(3,360→3,987억원)
  -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4→6개소(누적),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4→8개소(누적) 등 순환경제 기반 조성(0.30→0.32조원)
  -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10→40만명)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b>1. 녹색경제 기반 구축</b>	<b>31,971</b>	<b>34,351</b>	
- 탄소중립 설비 지원	2,388	3,096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등(1,221→1,617억원), 스마트생태공장(606→909억원) 등
- 녹색금융 공급	6,657	7,415	-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2,114→2,789억원) 등
- 탄소중립 R&D	19,394	20,045	-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1,854→2,564억원)
<b>2. 온실가스 감축</b>	<b>46,315</b>	<b>50,744</b>	
- 무공해차 보급 지원	24,078	27,402	- 무공해차 보조대수 확대(23.6→29.0만대) 등
- 조기폐차 지원	3,360	3,987	-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35만대 조기폐차 지원

#### 4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5.0→5.6조원)

- ◇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 공공비축 등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3.1조원)
- ◇ 자동차·조선·콘텐츠 등 주요 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 강화(1.4조원)

####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2.7→3.2조원)

- (수입선 다변화) 민간의 해외유전·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출·용자) 2배 확대(0.1→0.2조원)
- (국산화 R&D) 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2.1→2.3조원)
- (생산설비 확충)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투기업이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시 현금지원 인센티브(지원비율 +10%p) 강화
- (공공비축)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니켈·알루미늄 등) 및 석유 공공비축 확대(0.32→0.57조원)

\* (알루미늄, 니켈 등 6종) 비축자금 500억원 추가 조성, (석유) 25→36만톤

#### 【 수출·투자 여건 개선 】

(1.1→1.1조원)

- (수출) 中企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 1조원 보강(+500억원)
  - \* 무역보험·보증공급 규모 : (22) 210조원 → (23안) 211조원
  - 국내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물류바우처 지원 기간 1년 연장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1,282→1,526개소)
- (투자) 국가전략기술 보유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투자액의 40→50%) 및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확대(0.2조원)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26,841	31,598	
- 수입선다변화	1,091	2,159	해외자원개발용자 1,754억원 유전개발출자 301억원 등
- 국산화 R&D	21,441	22,639	소부장 17,896억원, 반도체 1,920억원 등
- 생산설비확충	1,070	1,070	외투기업지원 500억원 U턴기업지원 570억원 등
- 핵심자원비축	3,239	5,730	석유·석탄비축 693억원, 농수산물 4,068억원 등
○ 투자·수출 여건 개선	10,953	10,947	
- 지역투자촉진	1,881	1,998	신증설투자 지원 기업수 확대(73→75개)
- 수출물류지원	170	231	물류바우처 1년 한시 연장(170→231억원)

## 【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 】

(1.2→1.4조원)

- **(자동차)**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부품기업 전환 지원**\*(64→111개사) 및 **종사자 교육**(902→2,080명) 확대(0.5→0.6조원)
  - \* 시제품 제작,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 종합 지원
  -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818억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1,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R&D 강화
- **(조선)**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양성**(1,500명, 60억원<sup>신규</sup>), **소부재 생산 기능화 기술개발**(32억원<sup>신규</sup>) 등 지원(0.2→0.3조원)
- **(콘텐츠)**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기업 글로벌 진출 거점(10→15개) 확대 등(0.2→0.4조원)
  - \* IP펀드 등 6개 펀드에 2,200억원 신규 출자, 민간금융 3,200억원 규모 이차보전
  -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OTT 방송 제작지원** (IP 확보 전제) 등 **방송콘텐츠 산업 집중 투자**
- **(관광)** 관광산업 회복·도약을 위한 **“한국관광의 해”**(100억원<sup>신규</sup>)”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확대**(797→832억원)
  -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위한 **의료·웰니스 관광 확대**(120→132억원),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811→96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자동차	4,781	5,814	
-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58	80	지원 부품기업수 확대(64→111개)
- 자율주행기술개발	1,204	1,568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사업
○ 조선	2,278	2,587	
- 지역조선업 인력양성	-	60	중소조선업 생산인력 양성(1,500명, 신규)
- 선박소부재생산 지능화혁신기술개발	-	35	선박용 판재 가공·용접 등 자동화 기술개발
○ 콘텐츠 산업	2,169	3,668	
- 콘텐츠 정책금융	1,708	2,440	펀드 2,200억원, 이차보전 40억원, 보증 200억원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461	1,228	신기술접목 후반작업 지원, IP 확보 전제 OTT 특화방송 제작지원 등
○ 관광	2,616	2,770	
- 한국방문의 해	-	100	신규(+100억원)
- 광역권 관광개발	811	966	관광거점도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 등

5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8→4.6조원]

- ◇ **민간투자 유치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TIPS) 확대(500→720개사)**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온라인판로·스마트화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혁신 】**

[3.2→3.6조원]

- **(벤처·창업) 민간으로부터 경쟁력·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0.3→0.4조원)**
  - \* Pre-TIPS(사업화 지원, 30→43건) → TIPS(R&D 500→720건) + 사업화·해외마케팅(525→756건) → Post-TIPS(사업화 지원, 50→72건) 등
  - 글로벌기업·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 촉진(346→501억원)
    - \* 글로벌기업 협업(200→270개사), 대기업-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60→85건)
  -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강화
    - \* 창업중심대학(6→9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3개) 확대 등
- **(중소기업) 우수기업에 신성장자금 공급을 확대(1.6→1.7조원) 하고, 규제혁신,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 규제자유특구 안전성검증(+15억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8억원) 등
  - \*\* 해외 특허분쟁 대응지원(+66건), 기술탈취 보호지원(+91건) 등
  -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 지원 확대(0.6→0.7조원)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3,205→3,641억원), 상용화기술개발(2,280→2,529억원) 등
  - 공동 활용 물류인프라 신설(+135억원) 등 유통물류 안정화
    - \* 인천공항 부지 내 스마트 트레이드허브 신규 구축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민간주도 벤처창업 지원	4,748	6,343	
- TIPS 및 연계지원	2,935	3,788	팁스·사업화/마케팅, 프리·포스트팁스
- 창업중심대학	459	673	6개소→3개소(일반형 2+혁신형 1) 신설
- 글로벌기업 협업	300	405	글로벌기업 협업 지원(200→270개사)
-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76	96	대기업-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60→85개사)
○ 中企 혁신성장 촉진	27,245	24,273	(융자 포함 실지원규모 27,245→29,168억원)
- 혁신성장 자금 지원	16,200	14,886	융자규모 확대(1.6→1.7조원)+이차보전 도입
- 연구개발 지원	5,959	6,657	기술혁신·상용화기술개발, 산학연CollaboR&D 등
- 수출·물류 지원	1,194	1,512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신설, 물류바우처 등
- 규제특구 안착화 지원	16	58	실증특례 연장기업 안전성평가비용 지원 신설

##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재기 지원】

[0.6→1.0조원]

- **(회복·재기)**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2.9→3.4만명)
  - 30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채무조정프로그램\* 지속 지원(0.3조원)
    - \* 캠프를 통해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인수 →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3.5→4조원으로 확대
- **(온라인·스마트화)** 온라인 판로지원 6→7만개로 확대 및 스마트공방 1,000→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0.16→0.2조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의 팀빌딩·사업화·금융지원을 종합지원하고, 브랜드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287→844억원)
  - (강한소상공인) 팀빌딩(100→350개)·사업화(30→105개) 확대 및 펀딩·용자지원 신설(29→530억원)
  - (브랜드화) 골목형 로컬브랜드 육성(4개소, 10억원)
  - (지역상권) 지역상권 비즈니스전략 연구기획을 위한 상권발전소 신설(10개상권, 10억원)
- **(준비된 창업)** 청년 등의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을 확대(500→575개) 하고 체험점포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단계적 개편(199억원)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 소상공인재기지원	1,196	1,514	희망리턴패키지 2.9→3.4만명
- 소상공인채무조정	-	2,800	캠프를 통한 30조원규모 소상공인 채무조정
- 온누리상품권발행지원	2,915	2,898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3.5→4조원
- 온라인 판로지원	905	944	지원대상 6→7만명 확대 (교육 +0.3만명, 모바일 +0.7만명 등)
- 스마트화지원	770	1,048	스마트상점 미래형점포 +600개 신규지원 스마트공방 1,000→1,500개 확대
- 상권활성화	258	304	상권활성화 신규 7개소(대형 3개, 소형 4개) 상권발전소 신설 10개소(10억원)
- 로컬브랜드육성	-	10	골목형 로컬브랜드 4개소 육성
- 강한소상공인육성	29	530	팀빌딩 350개, 사업화 105개, 클라우드펀딩지원 1,000개, 매칭용자 400억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8	199	사업화지원 500→575개, 체험점포 3개소 창업지원플랫폼으로 개편

## ◇ '23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2년	'23년
과학기술 장군 육성	첨단 국방기술개발 (우주·AI·사이버)	244건	390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82만원	130만원
	병 급식비 단가	1.1만원	1.3만원
능동적 외교협력	소규모 무상원조	54개국	118개국
	중소국가 고위급 협력	-	54개국
일류보훈	보훈급여금 인상률	5.0%	5.5%
	참전명예수당	35만원	38만원
	위탁병원	640개	743개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 구축	-	1,700개
	항체양성률 조사	-	4만명
	후유증 조사	-	1만명
재난안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	90개소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	3개소
	재난·안전 헬기	신규6기	신규8기
	영상증인신문소	-	25개소

1 과학기술강군 육성 지원

[54.6→57.1조원]

- ◇ 한국형 3축체계,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증강 지원(+1.0조원)
- ◇ 병 봉급 인상(68→100만원<sup>병장</sup>), 급식·주거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 첨단전력 증강 】

[5.9→6.9조원]

- (3축체계)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 확충(4.8→5.3조원)
  - \* 장사정포 요격체계(189→769억원),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210→1,292억원), 대형기동헬기-II(353→3,507억원), 장보고-III Batch-I(825→2,486억원) 등
- (유·무인 복합) 로봇·드론을 활용한 무인기·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0.003→0.17조원)
  - \* 정찰용 무인항공기(신규, 1,262억원), 무인수색차량 연구 개발(22→356억원) 등
- (우주·사이버) 정찰·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0.03→0.07조원)
  - \* 초소형 위성체계(112억 → 270억원),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200→398억원) 등
- (핵심기술) AI·극초음속 등 핵심·미래도전 기술개발 강화(1.0→1.4조원)
  - \*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94→146억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41→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1.6→15억원) 등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한국형 3축 체계	48,036	52,549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응 능력 강화
○ 유·무인 복합	31	1,660	무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강화
○ 우주·사이버	312	683	적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정찰 능력 확보, 사이버 등 미래전장 요구 전력에 대한 투자 강화
○ 핵심 원천 기술	10,332	13,959	미래 첨단 무기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 **(병사)**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지급
  - **병 봉급**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82→130만원으로 인상(~'25년 205만원)
    - \* 병 봉급(병장기준) : ('22) 68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
    - 사회진출지원금 : ('22) 14 → **(23) 30** → ('24) 40 → ('25) 55만원
  - **급식** 급식비 인상(1.1→1.3만원/1日), 더 좋은 병영식당 확대(3→297개)
  - **주거** '23년부터 2~4인실 생활관 52동 신축(기존 9인실)
- **(군 간부)** 우수자원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으로 정예장군 육성
  - **선발** 단기복무장려금 50% 인상(장교 6→9, 부사관 5→7.5백만원)
  - **지휘** 여건소대장 활동비 2배 인상(병사 1인당 3→6만원) 및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年 240→360만원, 대대 기준)
  - **복무** 여건주택수당(月 8→16만원), 국민평형(32평형) 군 관사(신규, +504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지속 추진(4,712억원) 등 주거지원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b>○ 병사</b>	<b>48,862</b>	<b>62,070</b>	
- 병 인건비	23,050	28,259	병 봉급 월 67.6만원 → 월 100만원(병장 기준)
- 사회진출지원금	2,190	6,610	사회진출지원금 월 14.1만원 → 월 30만원
- 급식	15,538	17,170	급식단가(1日) 인상(1.1→1.3만원, +18.2%)
- 더 좋은 병영식당	-	304	시범 3 → 신규 297개 도입 확대
- 병영생활관	1,885	3,553	9인실 → 2~4인실 생활관 52동 신축
<b>○ 군 간부</b>	<b>5,860</b>	<b>6,687</b>	
- 단기복무장려금	329	587	장교 6→9백만원, 부사관 5→7.5백만원(50% 인상)
- 지휘활동비	187	336	(소대장) 병사 1인당 年 3 → 6만원 (주임원사) 年 240만원 → 年 360만원(대대기준)
- 주거	4,768	5,241	(주택수당) 월 8만원 → 월 16만원 (관사) 신규 총 644세대(32평형 504세대) (간부숙소) 신규 3,331실

-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ODA 대폭 확대(+14.2%)**
-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능동적 외교 지원 강화**

- **(ODA 확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대폭 확대(3.9→4.5조, +14.2%)
  -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19년 대비 '30년까지 ODA 2배 이상 확대(3.1→6.2조)
  - 러-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응을 위한 해외 긴급 구호(1,236→1,454억원, +218억원) 지원 확대
  - 글로벌 보건·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 확대
    - \*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 1억불 기여 정상 추진('23-'25년 3억불)
    - \*\*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0.1조원)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교섭을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118개국, +665억원), 연안국과의 협력(+139억원) 등 확대
- **(능동적 외교)** 2025 APEC 정상회의(+6억원),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10억원<sup>신규</sup>), 신안보포럼(+16억원) 개최 지원 등 글로벌 이슈 선도
  - 한국학기반확대(+23억원) 및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42억원<sup>신규</sup>), 재외국민 보호 강화(+10억원)를 통한 외교활동 인프라 확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 ODA 총 규모	39,419	45,031	대외경제협력기금, KOICA 국별 협력사업 등
- 인도적 지원	2,366	2,744	ACT-A 1억불 및 해외 긴급 구호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1,686	2,767	글로벌 보건 기여 확대(+0.1조원) 등
- 소규모 무상원조	115	780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가능성 있는 개도국 대상(118개국)으로 지원확대 및 강화
- 한국학기반확대	157	180	해외 유력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 (기금형 +5개교, 급여형 +4개교)
- 비대면 영사시스템	-	42	재외국민이 별도 인증서 없이 여권만으로도 비대면 영사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 **보상금 등 5.5% 인상**(‘08년 이후 최대), **참전명예수당 인상**(35→38만원)
-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급여)** 보훈급여금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6.0%\* 수준 인상
  - \* 보상금·수당 등 기본인상률 5.5% + 급여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 0.5%
  - **참전명예수당도 역대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27까지 +15만원)
    - \* ‘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 (‘22: 35→‘23: 38만원)
  - 상대적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총 9%),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총 20.5%)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하는 등 급여격차 개선
- **(사각지대 완화) 저소득(중위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25년까지 단계적 폐지**<sup>신규</sup>
  - \* 중증장애인(‘23) → 노인(‘24) → 전면 폐지(‘25) 순으로 폐지(보훈대상자 기준)
  -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현 75세 이상) 폐지**<sup>신규</sup> (+1.8만명)
- **(의료지원) 위탁병원 확충\***, 부산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96억원) 등 의료접근성 강화
  - \* 신규 103개(640→743개) 중 중증질환 치료 병원급 5년만에 추가 지정(+43개)
- **(보훈문화) 보훈 체험프로그램 확대**(32→182억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 존중 문화 확산\*\*** 등 지원
  -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 등(4인 기준, 75→153백만원)
  - \*\* 정전 70주년 계기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 증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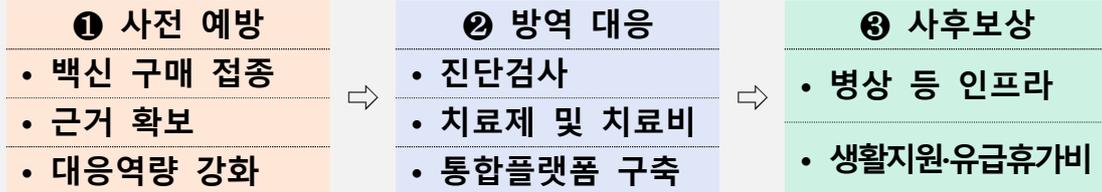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案	비고
○ 보상수준 강화	45,569	47,618	·(보훈급여금) 기본 +5.5% 인상+급여격차 개선 ·(참전명예수당) ‘27년까지 +15만원 인상 (매년 3만원씩 인상)
○ 의료지원 강화	6,619	6,882	·(보훈병원) 부산 요양병원 개원 소요 등 ·(위탁병원) 본인부담금 감면 연령기준 폐지 ·(보훈정신) 보훈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
○ 보훈문화 확산	937	1,289	·(예우강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 등 ·(정전70주년) 6.25참전유공자 제복증정, 기념행사

#### 4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6.9→4.5조원)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에방-방역대응-사후보상」 전반의 고위험군 집중 관리



#### 【 사전 예방 】

(3.5→1.1조원)

○ (백신구매·접종) 면역력 확보를 위해 백신 1.5천만회분 추가 도입,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차질없는 접종 뒷받침(0.9조원)

\* '22년 기 확보 물량 1.2억회분 + '23년 1.5천만회분 추가 도입

○ (조사·분석)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5.4만건), 분기별 항체양성률 조사 등 감염병에 대한 근거 중심 방역 뒷받침(0.03조원)

- (변이 분석) 변이 조기 인지를 위해 표본 감시·분석 물량 대폭 확대(1.0→5.4만건)
- (항체양성률 조사) 4만명 대상 자연감염 여부, 지역사회 유행 여부 등 조사
- (후유증 조사) 1만명 대상 3년 장기추적 관찰 연구('22~'25년)

○ (감염병 대응역량)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투자(0.2조원)

- (항바이러스 치료제) 감염체 구분 없이 RNA 바이러스 기전에 작용하는 신약 개발<sup>신규</sup>(38억원)
- (인력 양성)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양성(60→200명), 감염병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sup>신규</sup>(50명)

#### 【 방역 대응 】

(1.6→1.6조원)

○ (진단검사)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1.2조원)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외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용 RAT 병행

- (치료제·치료비 지원) 적극적 처방 통한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0.3조원)
  -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제 1.8만명분도 추가 구매하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지속 지원
- (플랫폼)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예측·분석을 위한 원헬스 위해정보시스템 등 구축(0.02조원)

## 【 사후 보상 】

(1.8→1.8조원)

- (병상 등 인프라) 상시 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 **신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0.3조원)
  - \* 감염병 위기 발생시 중증환자, 분만·투석·소아환자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
  - \*\* 호남권('18년~), 충청·경남권('20년~), 경북권('21년~), 수도권('22년~)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코로나19 확진시 취약계층 등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속 지원(0.1조원)

\*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b>○ 사전예방</b>	<b>34,710</b>	<b>11,409</b>	
- 코로나 예방접종	32,649	9,318	1.5천만회분 백신 도입, 접종시행비 등
- 면역도 조사체계 운영	-	77	4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 수행
- 변이 바이러스 분석	19	108	5.4만건 변이 바이러스 분석 지원
- 코로나 후유증 조사	-	73	1만명 대상 장기추적 관찰 연구 수행
-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38	신변종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
<b>○ 방역 대응</b>	<b>16,496</b>	<b>16,239</b>	
- 진단검사비	6,260	11,731	고위험군 PCR 검사 지원
- 치료제 구입비	3,933	3,843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주사제 1.8만명분
- 격리입원치료비	237	130	연간 입원치료비 지원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67	242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 완료
<b>○ 사후 보상</b>	<b>17,783</b>	<b>17,795</b>	
- 긴급치료병상	-	2,573	긴급치료병상 1,700개 신규 구축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266	187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지속 구축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2,406	1,216	취약계층 중심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 5 재난 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6.3→7.3조원]

- ◇ 수해 등 재난 예보·예방·대응·복구지원체계 고도화(5.0→5.8조원)
- ◇ 소방·군·경찰 등 현장대원의 개인장비 품질개선·신속 보급
- ◇ 강력범죄 출소자 전자감독 강화,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 등 확대

### 【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

[5.0→5.8조원]

- (예보기술·플랫폼) AI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 한강유역 침수 위험 지도 제작(~'23년) 등 스마트 예보체계 구축(1,662→2,000억원)
  - (AI 홍수 예보)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개발 및 수위관측소 확충(170억원)
  - (댐-하천 디지털 트윈) 고정밀 3차원 수재해 예측시스템 개발(6→54억원)
  - (도시 침수·범람 지도)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20→80억원)
- (전체 물길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국가·지방·소하천 등 모든 물길의 수위·유량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홍수위험 경보전송
  - \* 국가하천 전구간의 2,730개 지점에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설치(150억원)
  - '23~'27년 주택·인구밀집지와 인접한 소하천 전체(2,200개소) 수위계측 시스템 설치<sup>신규</sup>
  -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AI홍수 예보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정확한 홍수예보·침수위험 지도 제작 등에 활용
- (하천 등 위험지역정비) '26년까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90% 달성, 재해위험(침수위험 등) 잔여지구 100% 착수를 위한 투자 가속화
  - '23년 국가하천 3,603km를 점검·보수하는 한편, 재해위험지역 정비(691→740개소), 풍수해종합정비(55→80개소) 대폭 확대
- (도시침수 대응)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총사업비 약 9,000억원) 설치<sup>신규</sup>(+85억원)
  -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개소 추가 설치(695→770억원)
  - 통수(通水)능력 증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용량 확대 투자 대폭 확충(1.4→1.6조원)
  -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 도심하상도로에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sup>신규</sup>('23년 90개소, +68억원)

- **(복구지원)** 대형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배 확대**(1,000→1,500억원),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주택 40→49만명 등)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수해대응	50,233	57,708	
○ 예측·예보	1,662	2,000	AI기반 홍수예보 개발 등(170억원) 3차원 수해예측시스템(6→54억원)
○ 예방인프라	29,132	33,640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3개소(신규8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6,178→6,820억원) 국가하천정비(4,100→5,010억원) 하수관로정비(8,627→9,020억원)
○ 대응·복구	19,440	22,067	침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신규68억원) 재난대책비 규모 확대(1,000→1,500억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확대(254→364억원)

### 【 소방·경찰 개인장비 및 헬기 확충 】

[0.2→0.3조원]

- **(재난장비)** 산불·긴급구조 등 재난대응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헬기 증강(+2대)·노후대체(+6대) 투자 신규 확대**(신규 8대, +448억원)
- **(안전장비)** 군·경찰·소방·해경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원의 피복·헬멧 등 개인장비 품질개선 및 신속 보급(415→1,365억원)
  - 軍 방탄헬멧·전투조끼·응급키트 등 신속 보급(331→1,032억원)
  - 쏘 지역경찰·수사형사 대상 '경량 호신용 조끼' 신규 지급(+124억원)
  - 쏘 해경 특공대 방검부력조끼·진압헬멧 신규 보급 등(26→75억원)
  - 소방청 직속 쏘 현장대원 화재진압 안전장비 확대(4→1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장비 증점투자	1,643	3,234	
① 헬기 확충	1,228	1,869	(22년) 신규 6대 → (23년) 신규 8대
② 현장공무원 보호장비	415	1,365	
- 해경	26	75	(해경) 해상진압복헬멧방검부력조끼 방검복테이저건 방폭복 함정안전헬멧구명조끼 등 22종 1.5만개
- 소방	4	14	(소방) 개인가이드라인, 무선통신 라이트라인, 휴대용비상화학등 등 24종 1,962개
- 경찰	54	244	(경찰) 경량조끼, 중형방패등 4종 5.3만개
- 군	331	1,032	(군) 경량방탄헬멧(2,787개), 전투조끼(30,359개) 등

**【 생활 밀착형 안전 】**

**(1.05→1.1조원)**

- **(교통안전)**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보도정비(9,174→9,692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확대(8,466→10,925대) 운영,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sup>신규</sup>(‘23년 25대, 10억원)
- **(먹거리안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 감안,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잔류검사 범위 확대(291→34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10,536	11,215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174	9,692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 설치, 도로보수 등
- 교통과학장비관리	1,071	1,176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95억원) 이륜차 후면단속장비( <sup>신규</sup> +10억원)
- 수산물 위생관리	234	237	방사능분석장비(+15대)
- 해양방사성 물질 감시	39	59	해수 검사 지역 확대(45→52개소)
- 식품 잔류물질 검사	18	51	검사 대상(농산물→ 농·축·수산물)

**【 범죄예방·피해지원 】**

**(0.1→0.12조원)**

- **(범죄예방)**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치료·취업알선 등 사회복귀 지원(274→353억원)
- **(피해지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 확대(35→43명) 및 법정 출석을 대체하는 영상증인신문소(25개소) <sup>신설</sup>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案	비고
○ 범죄예방·피해지원	966	1,180	
- 전자감독 강화	274	306	· 고위험자용 강화스트랩 부착 등
-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	47	· 2개소 시범운영('23 신규)
- 영상증인신문소	-	13	· 25개소 신설
- 피해자국선변호사 확대	34	42	· 35명→43명 확대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수산·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 장애인·노인·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지속 및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

□ 소득·고용·주거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재난적의료비·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 보강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5.47%, 4人)으로 생계급여액 상향\*,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23.3% 인상 등 급여액 확대
  - \* 최대급여액: (1인) 月 58.3→62.3만원, (4인) 月 153.6→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4.8만가구)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 46→47%로 확대(+3.4만가구)하여 사각지대 보완
  - \* 재산기준(서울기준): (기본재산공제) 69→9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20→172백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상향하여(월 154→162만원)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
  - \* (의료비기준) 연소득 15→10% 초과, (재산기준) 5.4→7억원
- 두루누리 사업 지원요건 완화\*로 저임금 취약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구직 기간 중 소득안정 지원 강화
  - \* (소득기준) 최저임금 120→130% 이하, (사업장기준) 예술인특고 10인미만→쏘사업장 종사자
- 쪽방·반지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20만명) 및 피해자 긴급대출(0.2조원) 신규 지원
  - \* 이사비·생필품 지원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 용자 최대 5,000만원

□ 장애인·노인·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의 돌봄·소득·생활·의료 분야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
  - 발달장애인 낮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日 7.5→8시간)하고,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돌봄(최대 7일) 신규 지원

- '15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인상(月 4→6만원)하고, 장애인 연금 지원단가도 상향(月 30.8→32.2만원)
-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고,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신규 구축(14개) 등 의료인프라 확대
-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인상(月 30.8→32.2만원)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50→55만명)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月 30→40만원)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0.8만명) 신설
-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
  - \* (한부모) 중위 52→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 60→65% 이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치료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확충
- 코로나 백신 1.5천만회분 구입 및 접종(0.9조원),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 구축(2,573억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검진 확대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신규지원, 정신질환자·고위험군 전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2,124→2,205억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예방·재활)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조기개입) - 자살예방센터(사례관리)

(억원)

구 분	'22	'23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67,638	191,355	▪ 생계급여 +7,494억원, 의료급여 +9,751억원
▪ 취약계층지원	47,884	52,045	▪ 장애인활동지원 +2,514억원
▪ 공적연금	630,096	713,236	▪ 국민연금급여지급 +56,203억원
▪ 보훈	59,308	62,182	▪ 보상금 등 +1,691억원, 참전명예수당 +208억원 등
▪ 주택	358,263	334,600	▪ 분양주택(융자) +10,793억원
▪ 사회복지일반	9,473	10,103	▪ 사회복지서비스 펀드 +100억원
▪ 아동·보육	91,827	98,218	▪ 부모급여 +12,518억원
▪ 노인	204,592	231,143	▪ 기초연금 지급 +24,164억원
▪ 여성·가족·청소년	14,289	15,130	▪ 아이돌봄지원 +768억원
▪ 고용	259,383	236,137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813억원
▪ 노동	100,736	107,876	▪ 산재보험급여 +6,460억원
▪ 고용노동일반	6,045	6,340	▪ 고객상담센터 운영 +173억원
▪ 보건·의료	101,264	76,541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3,331억원
▪ 건강보험	119,242	124,102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4,710억원
▪ 식품·의약품안전	6,619	6,693	▪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R&D) +74억원
합 계	2,176,658	2,265,700	4.1% 증가

## <참고> 일자리 분야

### ◇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은 강화
  - 첨단분야 직업훈련 확대, 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도화\*
    - \* 전달체계 효율화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생계지원 강화 등
  -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강화\*\*, 고용장려금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여 지원
    - \* 직접일자리 규모 : ('22) 103.0 → ('23안) 98.3만명(3.2→3.1조원, △4.7만명)  
(노인일자리 △2.3, 지역방역일자리(한시) △0.7, 아동안전지킴이(지방이양) △1.2만명)
    - \*\* 노인일자리 내 민간·사회서비스형(+3.8만명) 확대, 고령자 고용장려금(0.9→6.1만명) 확대
- 신산업분야 인력 확충 및 맞춤형 훈련 신설 등 직업훈련 강화
  - (첨단산업) 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확대·개편(K-HighTech Training, +0.8만명),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 확대
    - \*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구축(10개소), 폴리텍 첨단산업학과 신설·개편(25개)
  - (국가기간산업)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일반직종 +5%, 인력부족직종 +10%)·훈련장려금(월11.6→20만원) 인상(6.4→7.1만명, +0.1조원)
  - (맞춤훈련) 중소기업(기업직업훈련카드 +1.5만개),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20만명), 중장년(DX-Academy, +21억원) 등 맞춤형 훈련 신규 지원
- 기업의 고용창출,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
  - (전달체계)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새일센터, 중장년센터 등)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 +180억원)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조선업·반도체, +17억원) 및 컨설팅(+7억원)을 통해 기업유형·업종별 맞춤형 채용서비스 지원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역량진단·경력설계·일자리추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상담프로그램개발 등 전문성 강화 +24억원)

□ 저소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강화(50만원→50~125만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사회보험) 저임금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특고·예술인(고용보험)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27.8만명)
  - \*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130%으로 확대(+17.5만명)
  - 예술인·특고 지원대상 사업장은 10인미만→소사업장으로 완화(+10.3만명)
-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장려금 인상(月30~80→35~90만원), 출퇴근비용(月 5만원) 지원대상\* 및 표준사업장 설립(90→120개소) 확대
  - \* (지원대상) 기준근로능력 취약 장애인(0.3만명) → 추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5만명)

□ 청년·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NEET(도약준비금 0.5만명)·대학생(도약보장패키지 3만명)·구직자(일경험 +1.0만명) 등 청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 (고령자)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1인당 월 10/30만원, 2년간)하는 고령자고용장려금 확대(0.9→6.1만명)

(억원)

구 분	'22년	'23안	비고
▪ 직접일자리	31,770	31,177	▪ 노인일자리 82.2만명, 자활근로 6.6만명
▪ 직업훈련	25,199	27,271	▪ 내일배움카드 1.2 → 1.4조원
▪ 고용서비스	18,989	17,615	▪ 국민취업지원제도 1.4 → 1.2조원
▪ 고용장려금	65,182	50,981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0→0.2조원, 고용유지지원금 0.6→0.2조원
▪ 창업지원	31,652	29,397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0→1.7조원
▪ 실업소득 유지·지원	137,715	134,351	▪ 구직급여 11.5 → 11.2조원
▪ 장애인지원	8,668	9,548	▪ 장애인고용장려금 0.26→0.30조원
합 계	319,177	300,340	

## 2      교육 분야

- ◇ 저소득 초중고·대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 ◇ 첨단분야(반도체 등) 등 산업·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확대
- ◇ 취약계층(장애인 등) 중심, 평생교육·직업역량개발 기회 확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집중 투자 추진

### 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유아) 안정적인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2년) 소요 반영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2) 3.83조원 → ('23안) 3.47조원
- (초중고)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소외계층 영재교육 확대(600→650명), 실감형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31억원)  
\* [고교 무상교육] ('22) 9,094억원 → ('23안) 9,028억원  
[영재교육 지원사업] ('22) 21억원 → ('23안) 22억원(600→650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22) 20억원 → ('23안) 31억원
- (대학생)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범위 확대,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유지  
\* 다자녀가구 공제액 확대 등: +4.0만명('22: 9,180 → '23안: 9,998억원)  
한국장학재단출연: ('22) 2,014억원 → ('23안) 3,217억원  
- 국립대학 승선실습 대학생의 급식단가 인상(7,150→13,000원), 피복 지급품목 확대(7개품목 추가 등) 등 복리후생 대폭 개선

### ② 4차 산업혁명, 지방대학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인재양성 종합 지원

-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추가 15만명 양성을 위해 정원확대(반도체특성화대학<sup>[신규]</sup>), 단기 교육과정 신설(부트캠프<sup>[신규]</sup>) 등 지원  
\* 주요사업: 반도체특성화대학 480억원, 반도체부트캠프 150억원 등  
-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교육·연구·실습 기반구축 예산\*\*도 지방대학 중심으로 중점 반영  
\* 예시: 반도체특성화대학 선정시 비수도권대학 비중 50% 지원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상향  
\*\* [주요사업] ①4개 권역 공동교육·실습 Hub 신규 구축(총사업비 656억원),  
②국립대 반도체 기자재 구입예산 10배 이상 확대(비수도권 중심, 46→560억원) 등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마이스터대 확대 등 신산업분야 고등 핵심인재 및 고속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강화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22) 890억원(8개) → ('23안) 1,443억원(13개 컨소시엄)  
[부처협업형인재양성] ('22) 420억원 → ('23안) 1,053억원

\* [마이스터대 지원] ('22) 5개교 101억원 → ('23안) 6개교 121억원  
[신산업 특화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22) 12개교 122억원 → ('23안) 14개교 142억원

○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핵심산업 산·학 협업 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2) 6개 2,440억원 → ('23안) 8개 3,040억원

③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대상·기간 확대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22) 29억원(15개소, 1년지원) → ('23안) 76억원(53개소, 3년지원)

○ 저소득층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및 저소득 장애인 별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22) 141억원(3만명) → ('23안) 206억원(6만명(장애인 0.3만명 할당))

○ 지적장애인 등 특수교육용 교과서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완공\*\* 지원

\* [특수교육 내실화지원] ('22) 146억원 → ('23안) 206억원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공주대)] ('22) 40억원 → ('23안) 174억원

④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 신설 추진

(억원)

구 분	'22	'23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707,301	824,3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650,595→772,806억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8,290→34,700억원)
· 고등교육	120,894	123,285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4,359→5,512억원) ·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1,287→1,779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2,440→3,040억원)
· 평생·직업교육	11,983	12,251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41→206억원)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9→76억원)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531→551억원)
합 계 (교부금 제외시)	841,571 (190,975)	961,383 (188,577)	14.2% 증가 (△1.3% 감소)

### 3

### 문화·체육·관광 분야

- ◇ 한국문화의 지속성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K-콘텐츠 지원 확대, 균등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및 문화예술 창·제작 활성화
- ◇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생활 스포츠에 대한 투자 강화
- ◇ 관광생태계 회복·도약을 위한 스마트·웰니스 관광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강화

#### □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 대응 지원

-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기업 세계 진출 거점(10→15개) 확대
  - \* IP펀드 등 6개 펀드에 2,200억원 신규 출자, 민간금융 3,200억원 규모 이차보전
-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OTT 특화 기획인력 양성(45억원), IP 확보 전제 OTT 방송 제작지원(449억원), IP 후속활용 지원(100억원) 추진
- 10억부 웹툰작가 육성(10억원, 신규), K-그림책 세계화(4억원, 신규), 영화기획개발(70억원) 등 분야별 콘텐츠 맞춤형 지원 강화

#### □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창제작 활성화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림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10→11만원), 장애예술인 함께누리\* 적극 지원
  - \* 장애예술인 신기술 활용 창작지원(신규 11억원), 장애예술인 전용 전시장(신규 12억원)
-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창·제작 유통사업(259억원), 문예회관 활용 방방곡곡 문화공감(178억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의 지역순회공연\* 활성화, 장애인·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관람환경 개선 지속
  - \* 전국 순회 발레공연(국립발레단, 20억원), 종묘제례악 순회 공연(국립국악원, 10억원)
  - \*\* 장애인 관람가능 음악극·뮤지컬(국립극장, 11억원), 장애유형별 안내서비스(국립박물관, 17억원), 장애유형별 도서자료 제작(국립장애인도서관, 104억원)

□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체육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노령층 특화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3개, 6억원) 신규 추진  
\* (지원금액) 월 8.5→9.5만원, (인원) 8.6→10.6만명, (기간) 10→12개월
- 국가대표 선수 수당·훈련비 현실화\*, '24 평창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344억원)  
\* (수당) 7→8만원, (숙박비) 4→6만원

□ 코로나 19 이후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및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플랫폼을 통합한 스마트관광도시(10→13개소), 관광기업 해외지원센터(1→2개) 확대
- 국제관광재개에 따른 방한관광 선점을 위한 한국방문의 해\*(100억원, 신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홍보·마케팅 강화  
\* 민관협력 항공·숙박·면세·식음 등 관광 프로모션 제공 및 각종 캠페인 개최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광 거점도시(5개소, 423억원), 광역관광개발사업(543억), 지역의료·웰니스 관광사업 연차별 투자 계속

□ 균형있는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및 소외분야 전수 장학생 지원 확대\*, 문화재수리 재료·역사문화센터 지원 등 보존 투자 강화\*\*  
\* 전승교육사 지원금(월 75→90만원) 취약종목 전수장학생(월 27.5→30만원)  
\*\* 문화재수리재료센터(209억원), 가야역사문화센터(268억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74억원)
- 궁능원·왕릉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문화재 관리 중대재해 안전보건 강화\*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217억원, 신규), 궁중 문화축전 및 전통공연 체험(208억원), 중대재해 안전보건(11억원, 신규)

(억원)

구분	'22	'23안	비고
▪ 문화예술	41,423	39,933	·OTT방송콘텐츠(+767), 콘텐츠 수출기반조성(+105) ·통합문화이용권(+214), 공연예술창제작 유통(+49)
▪ 체육	19,303	16,118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6, 3개소, 신규) ·우수선수 양성지원(+105)
▪ 관광	14,496	12,261	·고품격 관광 활성화(+202) ·관광거점도시(+92), 광역관광개발사업(+63)
▪ 문화재	12,014	12,935	·문화재보수정비(총액)(+594)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217)
합계	90,975	85,038	△6.5%

<b>4</b>	<b>R&amp;D 분야</b>
----------	-------------------

- ◇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해 정부 R&D 투자 30조원 돌파
- ◇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역량 활용 및 협업형 투자 확대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분야 R&D 투자 확대(3.7 → 4.5조원)
  - 반도체 등 시장 선점과 경제안보 및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
    - \* ①반도체, ②5G·6G·양자, ③미래모빌리티, ④우주, ⑤첨단바이오, ⑥이차전지, ⑦인공지능
    - (반도체) 경쟁국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반도체(AI·전력 반도체, 센서 등)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 ('23 신규) 140억원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 ('22) 153 → ('23) 277억원
    - (우주) 발사체·위성기술 고도화 추진 및 독자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주도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 \* 국가위성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 ('23 신규) 114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22) 561 → ('23) 1,427억원
    - (5G·6G 및 양자) 차세대 핵심기술(5G·6G, 양자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SW 안전성 확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 \*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23 신규) 62억원  
양자기술개발선도(양자센서) ('23 신규) 71억원
- 세계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미개척 분야\* 도전적 연구 지원(0.3→0.4조원)
  - \* ①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②난치병, ③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④로봇·VR/AR 등 일상혁신, ⑤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⑥우주기초연구지원
  - 핵융합·난치병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 추진
    - ※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22) 41억원 → ('23) 58억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22) 225억원 → ('23) 268억원  
(혁신도전형)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22) 40억원 → ('23) 123억원

□ 미래 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정부 중심 양적 투자가 아닌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성과 중심 전략적 R&D 투자 유도

- TIPS, 민간투자연계형 R&D 등 민간과의 연계 확대,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업 고성장 스케일업 확대
  - (민간투자연계) 민간에서 사업성을 판단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 및 민간 先투자 後정부 매칭 지원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민간투자연계형) ('22) 308 → ('23) 612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22) 2,157 → ('23) 2,681억
  - (민관협업투자) ①민간 제안사업, ②민관 합동 대형 R&D, ③기업 연계 실증 등 민관 협업 투자 확대
    - \* 다목적실용위성개발 ('22) 137억원 → ('23) 383억원 (과기부, 방사청, 산업부)
  -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기술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기술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장 스케일업 견인
    - \*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수출지향형) ('22)361 → ('23)906억원

□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기반 강화 추진

-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 대학(원) 과정의 기술융합 및 고도화 연구지원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재와 실무인재 확충
  -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22) 413억원 → ('23안) 586억원
  -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학석사연계CT핵심인재양성) ('22) 1,075억원 → ('23안) 1,283억원

			(억원)
구 분	'22	'23안	비 고
· 과학기술·통신 분야	96,556	99,775	· 개인기초연구(과기부)(16,283→16,367) · 다목적실용위성개발(35→375) ·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387→419)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4,545	75,149	· 소재부품기술개발(8,410→9,376) · 창업성장기술개발(4,086→4,423)
· 교육 분야	25,436	26,692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5,190→5,190) ·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2,180→2,590)
· 보건·복지 분야	11,173	10,979	· 연구중심병원육성(529→468) · 국가신약개발사업(420→412)
· SOC 분야	10,794	11,009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375→503)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34→422)
· 기타 부문	79,266	82,970	·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259→330) ·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104→138)
합 계	297,770	306,574	3.0% 증가

- ◇ 주력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 원전·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믹스+탄소중립 실현
- ◇ 민간중심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생태계 활력 제고
- ◇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집중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핵심전략산업·제조업 집중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핵심전략산업)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기술개발-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1.9조원)
    - \* (반도체) 인력 2.6만명 양성(0.45조원), 유망기술 R&D(0.39조원), 인프라사업화(0.17조원)  
(자동차) 미래차 전환지원·교육(145억원), 그린카(818억원)·자율차(1,568억원) 연구개발 등  
(조선) 생산인력 양성(60억원), 선박 소부재 생산 지능화(32억원) 등
  - (제조업) 스마트그린산단 5개소 추가선정, 스마트공장 고도화 신규추진(+523개소) 등 제조기반구축사업 고도화(0.4조원)
- 공급망 및 수출여건 개선을 통해 대외경제충격에 탄력적 대응
  - (공급망) 수입선 다변화, 주력산업 국산화 R&D, 유턴·외투기업 지원, 공공비축 강화\* 등 대외 공급망충격 대응역량 강화(3.2조원)
    - \* (석유·석탄) 석유비축사업출자 673억원, 석탄비축자산구입 21억원  
(희소광물 등) 회전자금전출금 500억원, 광해공단비축출자 372억원  
(농수산물) 농산물 비축지원 2,318억원, 수산물 비축지원 1,750억원
  - (수출) 플랫폼고도화·전문인력양성 등 디지털무역 인프라 강화 및 물류바우처·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물류애로 해소(0.1조원)
-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
  - (원전) 원전 기업역량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 및 국제경쟁력 복원(0.7조원)
  - (수소) 청정수소(그린·블루) 생산으로의 전환 추진, 상용차(버스 등)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 수소경제 쏠주기 지원(0.2조원)

- 창업·벤처기업 지원방향을 정부 → 민간중심으로 전환
  - (창업촉진) 대학자율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중심대학 확대(6→9개소),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1→3개소 이상) 등(0.1조원)
  - (벤처지원)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R&D·사업화자금 등 지원 (1,582개사), 글로벌·대기업 협업 지원(355개사) 등(0.5조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구조화
  - (자금) 유망기업에 대한 혁신투자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 활용 확대(용자규모 1.6→1.7조원)
  -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용화를 위해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지원 확대(0.7조원)
  - (물류) 공동활용 물류인프라 신설, 중소기업 전용 물류바우처 지원 등 수출·물류지원 강화(0.2조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기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온라인·스마트화) 온라인 판로지원 6→7만개, 미래형 스마트 점포 600개 신규지원, 스마트공방 1,000→1,500개(0.2조원)
  - (기업가형소상공인) 유망소상공인 팀빌딩·사업화·투융자 종합 지원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0.1조원)
  - (재기) 위기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2.9→3.4만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물량 3.5→4조원으로 확대(0.4조원)

(억원)

구 분	'22	'23안	비고
▪ 무역 및 투자유치	9,096	9,083	KOTRA 지원 3,008, 수출지원기반활용 1,197억원
▪ 창업 및 벤처	42,397	39,751	창업·재도전융자 26,330, 민관협력창업지원 1,865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141,851	91,432	중소기업융자 17,425, 소상공인융자 30,000억원
▪ 에너지 및 자원개발	50,695	48,201	신재생에너지보급 금융지원 6,643, 에너지바우처 1,824억원
▪ 산업혁신지원	58,334	57,834	소재부품기술개발 9,376, 지역투자촉진 1,998억원
▪ 지식재산일반	3,678	3,568	특허심사지원 666, 지식재산활용지원 278억원
▪ 산업·중소기업 일반	7,141	7,169	인건비 5,667, 기본경비 1,000억원
합 계	313,292	257,037	전년대비 △56,232(△18.0%)

6

SOC 분야

- ◇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하여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화
- ◇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

□ (재구조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하여 투자적정화

\* SOC 예산(조원) ('18) 19.0 → ('19) 19.8 → ('20) 23.2 → ('21) 26.5 → ('22) 28.0

- 계속사업은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 완공에 지장 없도록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SOC 지방이양 계획을 이행\*하고, 기존 사업들을 성과중심 체계로 개편\*\*하여 내실화

\*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 2,156 → 0억원, 주차환경개선 2,418 → 0억원

\*\* (예시) 도시재생사업 : 사업유형 통폐합(5→2개), 신규 사업지 조정(72→20개) 등 8,930 → 5,960억원

□ (교통혁신) 권역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망 확충 및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수도권 GTX) 기존 노선(A·B·C)은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1억원)

\* (GTX-A, 재정·민자) 4,609→5,059억원(공사비·건설보조금)  
(GTX-B, 재정·민자) 803→384억원(설계비 등) (GTX-C) 1,030→1,276억원(보상비 등)

- (지역 교통인프라)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 철도\*\* 등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

\* 고속도로 4건, 국도·혼잡도로 2건 신규착공 \*\* 차량구입비 지원 보조율 확대(50→70%)

- (저렴·안전한 대중교통) 알뜰카드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 및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로 입석 방지

\* (이용인원) 44 → 64만명 / (지원금액) 1회당 250원 → 350~500원

\*\* 1일 153회 투입 → 1일 203회 투입

- (교통약자 이동권)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및 운영비 등 정부지원 강화\*

\* (저상버스 도입) 2,248대, 986억원 → 4,299대, 1,895억원  
(장애인콜택시) (도입) 417대, 94억원 → 456대, 101억원 / (운영) 국비지원 신설 238억원

□ (미래혁신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 (디지털국토) 고정밀 전자지도(1:1000) 제작 확대,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국도) 등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 추진
  - \* 국가기본도 제작(1:1000) 100 → 566억원, 국도 도로대장 디지털化 20억원(신규)
- (모빌리티) UAM·PM(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 투자 강화
  -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년~)를 뒷받침하기 위한 2단계 (도심지) 실증실험시설 구축(87억원, 신규)
  -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특화도시 조성 (3개도시, 27억원),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
    - \* 기존환승센터(철도·버스 연계)에 새로운 이동수단(전기·수소차, UAM, 공유 모빌리티 등)을 연결하기 위한 충전소·거치공간 등 확보(2개소, 10억원)
- (스마트항공)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제공 개시('23~)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 지원(150억원, 신규)
  - \* GPS 오차범위를 축소(33→1.6m)하여 항공기 결항지연 방지, 유류비 절감 등 편익 제고

□ (안전투자)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

- (도로) 교량·터널 보수(4,501 → 4,957억원), 노후도로 포장정비 (2,519 → 2,760억원) 확대로 도로이용 안전 제고
- (철도) 탈선 예방을 위한 선로개량 확대 및 첨단장비 투입,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근로자 작업안전 제고
  - \* 고속일반철도간 연결선 보강(244억원) 및 첨단장비 도입(자동탐핑기 등 5종, 142억원)
  - \*\* 보도·안전난간·사다리 등 투자 확대(55→164억원)
- (수자원) 기후변화·집중호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제방정비 투자 대폭 확대(4,100 → 5,010억원)

(억원)

구 분	'22년	'23안	비고
○도로	85,478	77,828	· 건설(5.8 → 5.0조) · 관리(2.7 → 2.7조)
○철도, 도시철도	85,756	77,644	· 건설(5.4 → 4.3조) · 안전 등(3.1 → 3.5조)
○해운·항만	20,320	18,940	· 해운(0.4 → 0.4조) · 항만(1.6 → 1.5조)
○수자원	16,055	16,918	· 하천관리(0.7 → 0.8조)
○지역 및 도시	30,439	22,760	· 도시재생(0.9 → 0.6조)
○물류, 항공, 산단 등	41,635	38,656	· 산단진입도로(0.3→0.2조), 항공·공항(0.4→0.3조)
합 계	279,683	251,213	△28,470억(△10.2%)

##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
- ◇ 직불금 등 농어가 소득안정 강화 및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 ◇ 스마트 농어업 확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미래성장산업화
- ◇ 산림재해 예방·피해복구 및 국민체감 산림휴양자원 조성

### □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0.1조원), 비료·사료 구매자금(+0.1조원), 계란공판장 운송비(+56억원) 등 물가부담 경감
  -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2년) 590 → (‘23년) 1,690억원 (1인당 1만원)
  - \*\*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22년) 3,550 → (‘23년) 10,000억원 (+6,450억원)
- 탄력적 수급관리를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 2배 확대(70→140억원), 밀(1.4→2.0만톤)과 주요 수산물(1.3→3.2만톤)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 노지채소·과수·과채 등 계약수매 용자 규모 확대(+168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생산량의 20→23%, +100억원)
- 가루쌀 산업화\*(107억원<sup>산파</sup>), 밀·콩 생산단지 조성 및 신기술 보급\*\*,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밀-콩 이모작 250만원/ha) 등 핵심작물 생산 촉진
  - \*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 15개소, 가루쌀 사용 제분업체 시설·장비 지원 8개소
  - \*\* 밀·콩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170개소(+27억원), 밀·콩 시범 재배·가공단지(6개소)
  -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인수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13억원<sup>산파</sup>), 농업기업 해외진출 확대(12→15개) 등 수입선 다변화

### □ 농어가 소득안정 강화 및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명, +0.3조원),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512억원) 등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 기본형공익직불: (‘22년) 22,805억원 → (‘23년) 25,805억원(+3,000억원)
  - \* 수산공익직불제: (‘22년) 559억원 → (‘23년) 933억원(+375억원)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확대(45→85개, +415억원), 민간역량을 활용한 어촌신활력 사업 신규 착수(60개소, 444억원<sup>산파</sup>)

- **고령 농어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22년) 3,740억원 → ('23년) 4,151억원(+412억원)  
 \* 농지연금: ('22년) 2,106억원 → ('23년) 2,282억원(+177억원)

□ **스마트 농어업,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성장 산업화**

- **농업용 로봇 3종 실증(과수·논·밭, 30억원<sup>신규</sup>), 임대형·노지 스마트팜 및 수산기자재 클러스터(14억원<sup>신규</sup>) 등을 조성하고,**

\* 임대형 스마트팜: ('22년) 410억원 → ('23년) 615억원(+205억원, +3개소)  
 \* 노지 스마트농업: ('22년) 102억원 → ('23년) 57억원(일반 2개소, 유기농 1개소)

-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15개소), 저온·친환경 위판장 도입(5개소), 도매 온라인거래(+49억원) 등 생산·유통·소비 순과정 디지털 전환**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22년) 318억원 → ('23년) 358억원(+40억원)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22년) 23억원 → ('23년) 96억원(+73억원)

-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2→4천명),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0.1조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2년) 389억원 → ('23년) 541억원(+152억원)  
 \*\* 先임대-後매도 방식 농지 장기임대(81억원<sup>신규</sup>), 농업스타트업단지 공급(6ha<sup>신규</sup>), 비축농지활용 스마트팜 조성(6ha<sup>신규</sup>), 스마트팜 인근 임대주택단지 조성(30호, 1→4개소)

□ **자연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헬기(대형 +1기), 고성능산불진화차량(+9대) 등 장비보강 및 임도 (+264억원), 친환경 벌채(+13억원) 등 재해대응 능력 강화**

- **동서트레일 조성(+15억원),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40억원), 사회적약자 산림편의시설 확충(+9억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억원)

구 분	'22	'23안	비 고
▪ 농업·농촌	172,466	176,617	· 공익증진직불 26,868(+3,258), 비축지원 6,866(+1,245)
▪ 수산·어촌	28,428	29,365	· 수산직불제 933(+375), 어촌신활력증진 444(신규)
▪ 임업·산촌	27,599	27,576	· 임도시설 1,646(+264), 산림헬기 도입·운영 1,108(+334)
▪ 식품업	8,329	8,843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4,584(+556)
<b>합 계</b>	<b>236,822</b>	<b>242,402</b>	<b>2.4% 증가</b>

**8** | **환경 분야**

- ◇ 탄소중립을 新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는 녹색경제 전환 지원
- ◇ 과학적·실용적 NDC 달성을 위해 수송, 폐기물 등 부문 중점 투자
- ◇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국립공원 시설을 전면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1** 탄소중립을 新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는 녹색경제 전환 지원

- (공정개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목표관리제 중소·중견 기업, 탄소 多배출업종 중소기업 등 맞춤형 공정혁신 지원
  - \*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99→140개사 등(1,221→1,617억원), (목표관리제 / 탄소 多배출업종) 스마트 생태공장 60→90개사 (606→909억원)
- (녹색금융) 대규모 투자(녹색채권,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직접 용자, 펀드 등) 등 기업 규모에 맞춘 금융지원
  - \* (대규모 투자) 녹색채권 3조 8,722억원(97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52조원(253억원) 등 (중소·벤처)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3,700억원(2,789억원), 환경산업펀드 900억원(450억원) 등
- (R&D)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104→138억원), 온실가스 공간정보기반 구축<sup>신규</sup>(60억원) 등 탄소중립 R&D 지원

**2** 과학적·실용적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폐기물 등 감축효과가 큰 부문 중점 투자(4.6→5.1조원)

- (수송) 전기차·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 (누적 48→77만대)하고, 충전인프라(누적 16.0→22.2만대) 확충(2.8→3.3조원)
  - \*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인상 : ( 시내버스 ) 1.5→2.1억원, (광역버스) 2.0→2.6억원
  - ※ 연료전지 교체지원(신규) : 5년/50만km까지 1회 → 9년/90만km까지 3회 교체도 신규 지원

구 분	'22년	'23년	전년대비
전기차(누적)	44.6만대	71.9만대	+27.3만대
수소차(누적)	3.7만대	5.4만대	+1.7만대
전기차 충전기(누적)	16만기	22.2만기	+6.2만기
수소차 충전소(누적)	250기	300기	+50기

- (폐기물)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4→6개소(누적),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4→8개소(누적) 등 순환경제 기반 조성(0.30→0.32조원)  
\* 음식물쓰레기·분뇨·하수슬러지 등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 (국민생활)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10→40만명)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및 탄소포인트제(151→240억원)

③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홍수·가뭄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국립공원 시설을 전면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물환경)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노후 정비 및 산·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 대폭 확대(13,591→16,438억원)
  - 특히, 강남역, 광화문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2개소(총사업비 6,000억원) 지원(+55억원)  
※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총사업비 3,000억원)도 지원(+30억원)
  -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유충 유출 차단시설 확충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sup>산규</sup>(227억원)
- (대기) 대기 정체 발생일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등 지원  
\* (조기폐차)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00만원 신규 지원(9만대, +1,800억원)  
(조기예보) 고농도 미세먼지 조기 예보 실시(12시간 전 → 2일 전, +23.5억원)
- (국립공원) '27년까지 노후·낙후된 국립공원 필수 편의시설\*을 전면 재건축·보강하는 '에코 리모델링' 추진<sup>산규</sup>(481억원)  
\* 대상시설 및 계획물량(~'27년, 개소) : (화장실)185, (야영장)24, (주차장)31, (안내소)17

(억원)

구 분	'22	'23안	비고
▪ 물환경	43,388	42,932	- 하수처리장 설치(4,964→7,418억원)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3,712	14,491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2,114→2,789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350→1,468억원)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006	48,200	- 무공해차 보급사업 (24,078→27,402억원) -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1,221→1,617억원)
▪ 자연환경	9,058	10,141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2,257→2,864억원)
▪ 환경일반	4,897	5,015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520→525억원)
▪ 해양환경	3,304	3,296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128→227억원)
합 계	119,365	124,075	3.9% 증가

**9 국방 분야**

◇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 및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 병 봉급 인상, 의식주 등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장병 사기진작

-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 전략적 육성
  - 장사정포 요격체계(189→769억원),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210→1,292억원) 등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 확충(4.8→5.3조원)
  - 무인·우주 등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 도입, 국방 R&D 내 핵심·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대
    - \* 정찰용 무인항공기(신규, 1,262억원),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94→146억원)
  - 국방 신산업(우주·AI·사이버 등)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풀패키지 지원 및 수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 방산혁신기업 지원(신규, 310억원), 무기체계 개조개발(582→757억원)
-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 봉급 및 의식주에 대한 투자 확대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병장 기준, 67.6→100만원, 전역자 월 14.1→30만원)
    - \* 병 인건비(23,050→28,259억원), 사회진출지원금(2,190→6,610억원)
  - 상용이불(66.5만개 즉시보급), 방탄헬멧(+2,787개, '23년 보급완료), 전투조끼(4,842→30,359개, '23년 보급완료) 등 개인전투장비 신속 보급
    - \* 상용이불(신규, +213억원), 방탄헬멧(30→40억원), 전투조끼(4.4→27.8억원)
  -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병 급식비 인상(1일 1.1→1.3만원) 및 더 좋은 병영식당 사업 확대(3→297개),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3,188→3,305명)
    - \* 기본급식(15,538→17,170억원), 더 좋은 병영식당(신규, +304억원)
  - 국민평형(32평형) 군 관사\*(신규 644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지속 보급(신규 3,331실), 2~4인실 병영생활관 신축 등 주거지원 강화
    - \* 32평형 관사 : '22년 0세대(총 308세대 중 0%) → '23년 504세대(총 644세대 중 78%)

(억원)

구 분	'22	'23안	비 고
▪ 방위력 개선	166,917	170,179	· 한국형 3축체계(48,036→52,549억원, +9.4%) · 핵심·도전 국방기술개발(10,332→13,959억원, +35.1%) · 방위산업 육성 지원(1,246→1,759억원, +41.1%)
▪ 전력운영	379,195	401,089	·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67.6→100만원, +47.9%) · 사회진출지원금 (월 14.1→30만원, +112.8%) · 급식단가 인상 (1.1 → 1.3만원, +18.2%)
합 계	546,112	571,268	4.6% 증가

- ◇ ODA 대폭 확대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능동적 외교
- ◇ 대북 인도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지원 강화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신규6억원), 신안보포럼(+16억원) 등 능동적 외교 지원
  - 소규모 무상원조(+665억원, 97개국), 주요인사 방한 초청(+20억원), 중소국가 대상 고위급 협력(신규11억원) 추진을 통한 외교적 외연 확대
  - 한국학 기반확대(+23억원),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신규42억원), 재외국민 보호 역량강화(+10억원) 등 외교활동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 위한 ODA 대폭 확대 추진(3.9→4.5조, +14.2%)
  - \* 국정과제 99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러-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응을 위한 해외 긴급 구호(1,236→1,454억원, +218억원) 지원 확대
    - \*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 1억불 기여 정상 추진(23-25년 3억불)
    - \*\*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0.1조원)
  - 글로벌 보건·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 확대
    - \*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 1억불 기여 정상 추진(23-25년 3억불)
    - \*\* 글로벌 보건문제 해결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0.1조원)
  -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대개도국 차관(EDCF) 규모 확대(1.3→1.5조원)
-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 강화
  - 코로나 19 관련 인도적 지원(신규488억원)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교육 등 강화(신규15억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인상(8→9백만원)으로 초기 지원 강화(+5억원)

(억원)

구 분	'22	'23안	비 고
· 외교·통상 부문	44,180	49,020	· 대개도국 차관(13,334→15,030)
· 통일 부문	15,363	14,860	· 민생협력지원(5,131→6,259)
합 계	59,543	63,880	7.3% 증가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재난예방 인프라투자 강화 및 ICT기술 활용 재난대응 고도화

- 아동·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스토킹,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척·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및 치안 인프라 확충
    - \*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확충(9.3 → 21.9억원), DNA 감정 장비 확충(6.7억원, 신규) 등
  -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강화(+32억원)
    - \* 전자장치 스트랩 강화 및 CCTV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전담변호(35→43명), 진술 분석관(16→24명) 확대 및 영상증인신문소 신설(25개소)(+100억원)
- 대형재난에 대응, 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응, 효과성 높은 예방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며, 재난대비 사전적 대응역량 강화 추진
    - \* 재해위험지역 정비물량(691개소 → 740개소), 우수저류시설 설치(신규 8개소)
  - AI·빅데이터, IoT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화하는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 \*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sup>신규</sup>(90개소, 3년간 총 270개소)

(억원)

구분	'22	'23안	비 고
· 법원 및 헌재	21,763	22,333	· 국선변호 지원(387→427), 조정제도 지원(122→128), 사건기록전자화(7→16)
· 법무및검찰	43,848	44,329	· 전자감독(274→306),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47, 신규), 영상증인신문소(+13, 신규), 피해자국선변호(91→97)
· 경찰	126,461	127,723	· 경량 호신용 조기 도입(+124, 신규), 중형방패, 접이식방패 도입(+9, 신규), 지역경찰 등 권총 교체(1.5→37)
· 해경	17,107	18,356	· 합정건조(1,373→1,742), 항공기도입(573→654)
· 재난관리	14,005	15,839	· 재해위험지역 정비(6,178→6,820), 풍수해보험(254→364) ·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68, 신규)
합계	223,184	228,580	24% 증가

-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포용적 금융 등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 ◇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 등 지방소멸 대응 및 활력 제고

- 민관협력 기반 혁신적으로 일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
    -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해 허브 확대 구축(금융→교육, 복지, 의료, 통신)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혁신 가속화
    - \* 국민체감선도프로젝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AI기반 기상예보 생산 등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 등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
  - \* 청년도약계좌: ('23) 3,528억원(순증) / 소상공인 채무조정: ('23) 2,800억원(순증)
- 지방소멸 대응·접경지역 지원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주거·통신 등)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출연,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22) 7,500 → ('23) 10,000억원(+33.3%)
    - \*\* 접경지역 지원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평화빌리지 조성 등 9개사업 499억원

(억원)

구 분	'22	'23안	비고
▪ 정부자원관리	13,887	11,124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60→136) ·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787→895)
▪ 재정·금융	237,996	281,877	· 청년희망적금(476→3,602), 청년도약계좌(신규, 3,528)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2,800) · 국고채 이자상환(156,660→192,071)
▪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673,219 (22,659)	771,974 (19,091)	· 지방교부세(650,560→752,883)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7,500→10,000)
▪ 입법 및 선거관리	15,870	11,404	· 선거장비및물품관리(25→361) · 입법활동지원(444→538)
▪ 일반행정	33,378	34,006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1,810→1,936) · 원자재및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10→92)
▪ 국정운영	6,587	6,750	· 청년정책총괄조정및지원(41→92) ·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5,457→5,544)
합 계 (교부세, 국고채이자 제외)	980,939 (173,718)	1,117,135 (172,181)	13.9% 증가 (교부세 등 제외시 △0.9%)